2011.12.21 NO.139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기획특집

희망을 차곡차곡 온기를 구석구석 P27~43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비자금·분식회계 신고자 보호해야죠" P10~11

소리의 감동 보여주다… 실로암 시각장애 관현 예술단 창단연주회 P44~45

가정경제 주름살 펴려면

오종남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세계경제는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2011년 회복을 기대했으나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문제로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G7, G20, EU, IMF 등 각종 회의에서 세계의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묘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2012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다. 2010년 한국 경제가 6.2퍼센트 성장한 것을 두고 밖에서 우리 경제를 칭찬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국내의 평가는 냉혹하리만큼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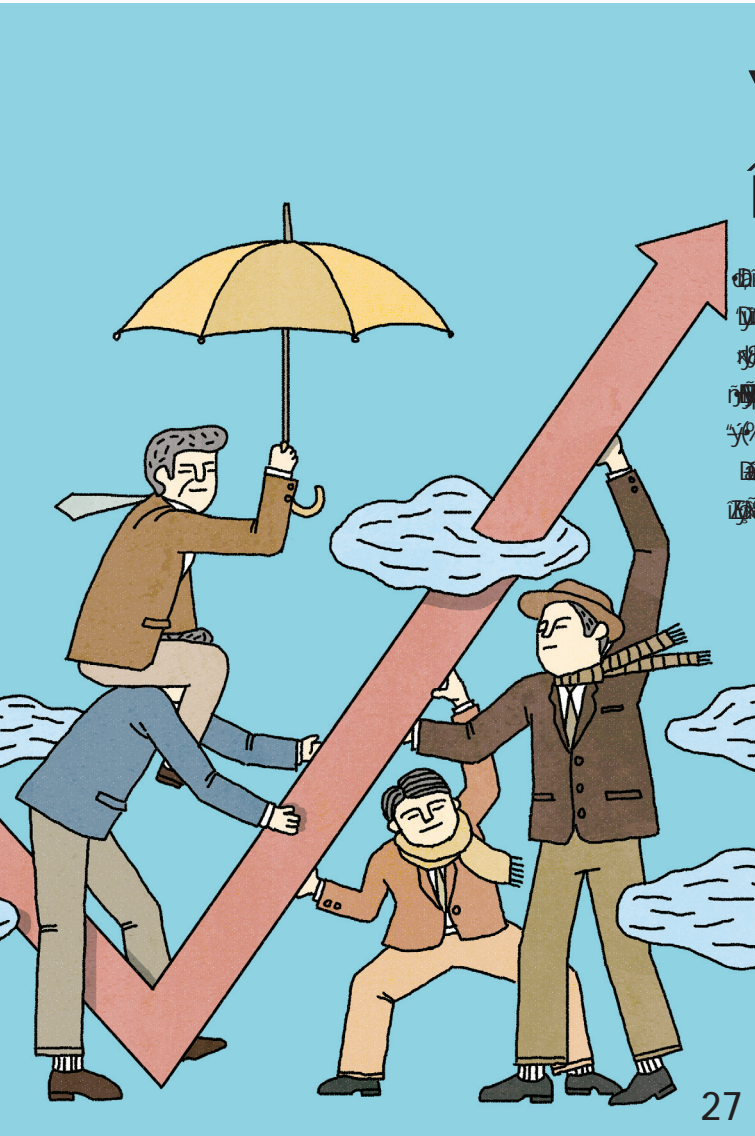
2010년 1분기 한국 경제가 8.5퍼센트 성장했다는 발표 직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필자는 이것을 거시경제(Macro-Economy)와 미시경제(Micro-Economy)의 괴리에서 온 결과라고 해석한다. 세계가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는 경제성장은 몇 퍼센트나 했는지, 물가는 몇 퍼센트나 뛰었는지, 무역수지 흑자는 몇 억 달러인지, 취업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등의 거시 지표를 본다.

반면에 국민은 나라 경제보다는 자기 가정경제에 관심이 많기 마련이다. 자기 가게의 매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학교를 졸업하는 내 아이가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인지(전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전세 기한이 만료될 때 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 등이 주된 관심사인 것이다.

2012년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이런 때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을 기르는 일은 절대 멈출 수 없다. 아울러 그 행렬에 대다수 국민이 신바람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의 주름을 펴 주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첫째는 대기업, 둘째는 수출산업이다. 대기업과 수출산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2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함에 있어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나라 경제와 함께 가정경제도 생각하는 일이다. 특히 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선거의 해'다.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될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때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을 기르는 일은 절대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아울러 그 행렬에 대다수 국민이 신바람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의 주름을 펴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 이것은 재정의 부담 능력이다. 지나치리만큼 사회복지 확충을 추구하다 재정이 어려워진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Contents

NO.139 2011.12.21

한·미FTA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저작권 침해 없는 인터넷 검색은 자유"

지난 14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 포털업체, 웹하드업체, 출판업체 등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와 일반인도 참석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일에 공포됐고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개정 저작권법은 적잖은 오해를 받고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는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해를 일으킨 대목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하는 환경이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규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제35조2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효율적 정보처리 위한 컴퓨터 복제저장 허용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이용범위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분야라도 공정이용이라 판단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처럼 저작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태블릿PC를 활용한 어린이 공연 모습.

공정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영리성의 유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가령 UCC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유통시킨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해당 동영상이 영리성이 없고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다면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도입해 출판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권리를 다른 형태의 저작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전자출판 등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음반, 공연, 방송 등의 분야에 존재한다. 가령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이 권리가 인정된다. 방송은 보호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은 한·미FTA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소멸되는 저작인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미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으며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다.

영화관에 녹화장비 소지만으로 '도촬' 처벌 못 해

위성방송사나 유선방송사가 셋톱박스를 통해 보내는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복호화(암호를 푸는 행위)하는 기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청 질서는 물론 방송사의 투자를 한층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 및 불법 라벨을 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음반이나 DVD 등에 부착되는 라벨로 정품 여부를 판단하고 제품을 구매한다. 이 라벨을 위조하여 불법복제물 제작자에게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품에 붙은 라벨을 따로 떼어 유통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촬(도둑촬영)도 금지된다. 캠코더 등을 이용해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하거나 이를 공중 송신할 경우 발생하는 관련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되지만 그렇다고 녹화장비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 12월 14일 열린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에는 많은 저작권관련 종사자들이 몰려 배타적 발행권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영리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처벌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권리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해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저작권은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손해액은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적인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이다.

비친고죄의 대상도 확대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 원칙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비친고죄 대상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처벌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저작권업계 종사자들은 배타적 발행권·법정손해배상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배포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현황자료→보고서·발간물에서 볼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알리기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비자금·분식회계 신고자도 보호해야죠"

관가가 차분히 '결산 모드'에 들어간 12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새로 도입된 법이 민간부문의 부패·비리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정작 기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해도는 크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DB

김영란 위원장은 "OECD 국가들은 일찌감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부패방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올해 권익위의 역점 사업인 만큼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하는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릴 예정인 한편, 1만여 중소기업 회원을 둔 벤처기업협회 소식지에 기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불황으로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이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갑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어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2006년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체 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사람이 소송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돼 도리어 참기름 제조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2백65건이 신고됐다"면서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소관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다양하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곳들까지 다 합치면 공익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안전 등 다섯 가지 공익신고 분야가 있던데, 주로 어떤 분야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약 65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외에도 소비자기본법 위반 관련 소비자의 이익 분야 신고(약 16퍼센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경쟁 분야 신고(약 5퍼센트)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얼마 전 첫 이첩사건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1일, 주유소 운영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공모해 등유와 보일러등유를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관련 사항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이첩되거나 송부된 신고내용이 수사나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로 확정되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회복이 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KTX의 내부결함을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 제보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지난 9월 30일 제도 시행 당일 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와 보호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언론 제보를 '신고 준비행위'로 보아 철도공사에 복직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홍보 대상은 기업체 쪽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을 돌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권역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CEO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CEO 대상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회도 이미 시작했다"면서 "지난 11월 28일 서울, 12월 7일 제주도에 이어 13일 강원, 20일 대구·경북 등 내년 2월까지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제도 운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는 4백56개로 정해놓았는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1백69개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11개 신고대상 법률을 포함해 총 1백80개 법률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범위와 보호범위가 축소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비자금이나 분식회계를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등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자체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업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조례안이나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종 매뉴얼과 가이드 보급, 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법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신고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기명(記名)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를, 기업 대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통한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OECD 주요국가는 일찌감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G

글·오동룡 기자

지난 12월 14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고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해양경찰장으로 열렸다. 운구차에 이 경사의 시신이 실리는 순간 딸 지원(14)양이 오열하고 있다.

"나라 위한 의로운 행동 영원히 기억"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 뺏긴 이청호 경사 대전 현충원에 안장

"아빠, 나 여기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나포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41) 경사의 관에 매달려 딸 지원(14)이가 울었다. 지원이의 눈물이 태극기로 감싼 아빠의 관을 적셨다. 지난 12월 14일 오전 10시 영결식이 진행된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모인 9백60여 명의 조문객 머리 위 하늘에는 조기(弔旗)가 걸린 듯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저 수평선을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피가 끓습니다.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데…."

지난 5월 인천해경 3005함에서 만난 이청호(41) 경장은 말수가 적었다. 각지고 검게 그을린 얼굴은 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기자는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 현장 르포 기사를 쓰려고 2박 3일간 승선했다. 12월 12일 이 경장이 불법 어로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져서 걱정입니다. 나도 싸움이라면 자신 있지만…" 하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당시 3005함은 출항 하루 만에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했다. 3천톤급 함정을 흔드는 집채만 한 파도 속에서 이 경장은 대원 10여 명과 함께 작은 고속단정(1.8톤)에 옮겨 탔다. 안개 때문에 불과 2~3미터 떨어진 사람 얼굴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누구보다 강하고 방심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는 두 시간 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방검복(防劍服)과 헬멧을 벗은 그의 머리에서 김이 솟아올랐다. 3005함 갑판에서 그가 내쉰 짧은 한숨은 모든 대원이 무사한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런 그가 숨졌다. 12월 12일 새벽 소청도 앞바다에서 언제나처럼 중국 어선 조타실에 들어가 선장을 제압하려다 불의의 습격을 당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려다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그는 검색팀장이었다.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중국 선원 수십 명과 망망대해 위에서 싸워야 하는 나포조 10여 명의 선봉 역할이었다. 조타실에 들어가 선장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언제나 가장 먼저 중국 어선에 올랐다.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내가 생긴 것이 험악해서 그런지 중국 선원들이 날 보면 겁을 집어먹습니다" 하면서 순하게 웃었다.

1996년 특전사 예비역 중사로 전역한 그는 1998년 순경 특채로 해양경찰이 됐다. 특수 구조단, 특수 해상 기동대, 특공대 폭발물 처리팀 등 언제나 특별한 임무는 그의 몫이었다. 12일 그의 빈소가 있던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부인 윤경미(37)씨와 장녀 지원(14), 장남 명훈(12), 차남 명현(10)이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고인은 삼남매를 애틋이 대했다고 한다. 14일 이 경사의 영결식에서 장의위원장을 맡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 경사로 1계급 특진한다는 임명장과 옥조근정훈장을 놓았다. 모 청장은 조사를 읽다 "당신의 나이 이제 겨우 마흔"이라는 대목에서 목이 멨다.

"대원들엔 절대 다치지 말라 하고선"

"정부는 고인의 의로운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를 최동해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대신 읽었다.

고인과 불법 중국 어선 나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성원 순경은 "그날도 대원들 장비를 꼼꼼히 살피며 '절대 다치지 말라'고 당부하던 분이 어찌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라며 고별사를 전했다. 바다 사나이들은 온몸으로 눌러온 울음을 이기지 못해 어깨를 들썩였다. 고인을 애도하는 조총 9발이 발사되고 해경 6백여 명이 고인에게 마지막 거수경례를 보냈다.

이 경사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3005함 동료들이 관을 운구차로 옮겼다. 영결식장을 빠져나가는 운구차를 부두에 정박해 있던 3005함이 30초간 뱃고동을 울리며 배웅했다.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된 이 경사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글 · 한상혁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정부대책

어획물 강제 압수 · 담보금도 2억원으로 올려 해경 특공대원 2014년까지 8백여 명 증원키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대한민국 해양경찰대원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公憤)이 증폭되고 있다. 2008년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대원이 숨진 데 이은 두번째 희생자다.

그동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가 부상한 해양경찰도 27명이나 된다.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한 중국 선원의 저항이 흉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중국 어선을 감시할 해경 특공대원이 현재보다 8백여 명 늘어난다. 해경 대형함정과 어업지도선은 각각 9척, 4척을 새로 도입하는 등 총 8천8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어획물은 반환하지 않고 압수하며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100퍼센트 높이기로 했다.

지난 12월 15일 한나라당 정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게 된 건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 중국 어선들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1시간 내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해경의 대형함정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각각 8천억원과 8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함정과 어업지도선은 각각 29척, 34척 확보돼 있지만 한국 해경에 의해 적발된 중국 어민들 중 평생 한 번도 단속받은 적 없는 이들도 허다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대형함정에 탑승할 해경특공대원을 2014년까지 총 8천28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총 8백1명 늘린다. 현재 4백50명 수준인 어업지도선 단속반원 숫자도 48명 늘리기로 했다.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어획물을 담보금만 납부하면 그대로 돌려주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 강제압수하기로 했다.

현재 1억원 이하인 담보금 부과기준도 2억원 이하로 높인다. 개정 담보금 부과기준은 중국 일본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할 전망이다.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원이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경 대응 매뉴얼을 단순화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2월 16일 이청호 경사를 기리기 위해 경찰서 내 빈 사무실에 상설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모공간에는 고인이 입던 특공대 복장과 정복 등 옷가지와 나포작전 당시 사용하던 장비, 동료와 찍은 사진 등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새마을회 등 8개 사회단체는 이달 안으로 시민 대상 모금 운동을 벌인다. 추모비는 이 경사 순직 1주기를 맞는 내년 12월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세워질 예정이다.

산업화의 불을 지핀 '영원한 철강왕'

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제철보국' 신념 하나로 세계적 기업 일궈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지난 12월 13일 별세했다. 사인은 급성 폐 손상이었다. 향년 84세. 그의 삶은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자신의 신조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는 늘 혼신의 힘을 다했다. 눈을 감기 직전 그는 말했다. "포스코가 국가 경제 동력으로 성장해 만족스럽다. 포스코가 더 크게 성장해 세계 최고가 되길 바란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삶은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빈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제철기업(포스코)과 명문대학(포스텍)을 일구었다.

"내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실수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이 상식을 초월한 일을 해내는 바람에 내 분석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1986년 영국의 존 자페 박사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나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 자신의 보고서가 박 회장 탓에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었다. 연유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는 5개국 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한 차관을 요청해놓고 있었다. 우리 측의 끈질긴 설득에 긍정적인 약속도 받아놓았다.

하지만 KISA의 태도는 돌변했다. 당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에 제철소 건설은 시기상조"라는 보고서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존 자페 박사는 당시 보고서 작성의 실무책임자였다. 20년이 지나 자페 박사는 '박태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착공 39개월 만에 첫 쇳물… 조업 6개월 만에 흑자

박 회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철강왕이다. 조업을 시작한 지 단 6개월 만에 흑자를 냈고 맨땅에 제철기업을 일으킨 지 고작 14년 만에 현역 철강인으로는 처음으로 철강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베세머 금상'을 수상했으며 1992년에는 2천1백만톤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철강상으로 꼽히는 '윌리코프상'을 받았다.

박 회장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리더였다. 가난한 조국의 발전에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철과 같았다. 포스코의 성장에 대한 공로를 들을 때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뭐 대단하다고"라고 답했다. 국가를 위한 소명의식은 무한책임과 강인한 집념으로 나타났고 이는 무일푼으로 세계적인 제철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됐다.

1968년 포항제철 사장 부임 후 가장 큰 고민은 '돈'이었다. 제철소를 지을 돈이 없었다. KISA에 희망을 걸었지만 무산됐다. 박 회장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일본을 설득했다.

1973년 첫 쇳물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자 박 회장과 임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왼쪽)과 2006년 포스텍 개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 회장.

농업용으로 제공됐지만 제철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박 회장은 보는 이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의 진지한 노력에 일본이 감동했다"고 회고했다.

자금을 확보한 그는 직원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었다. "이 제철소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피값으로 짓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죽어야 합니다."

박 회장과 동료들의 '필사의 의지'는 기적을 낳았다. 착공 39개월 만에 첫 쇳물을 얻을 수 있었다. 대개 제철소 건설에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포항의 영일만은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었다. 박 회장의 사인인 폐 손상은 당시 그가 들이마신 모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투명함과 청렴'은 기업인으로서 박 회장이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다.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한 그이지만 남긴 유산이 전혀 없을 정도다. 1988년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10퍼센트의 지분을 우리사주로 나눠줄 때조차 그는 단 한 주도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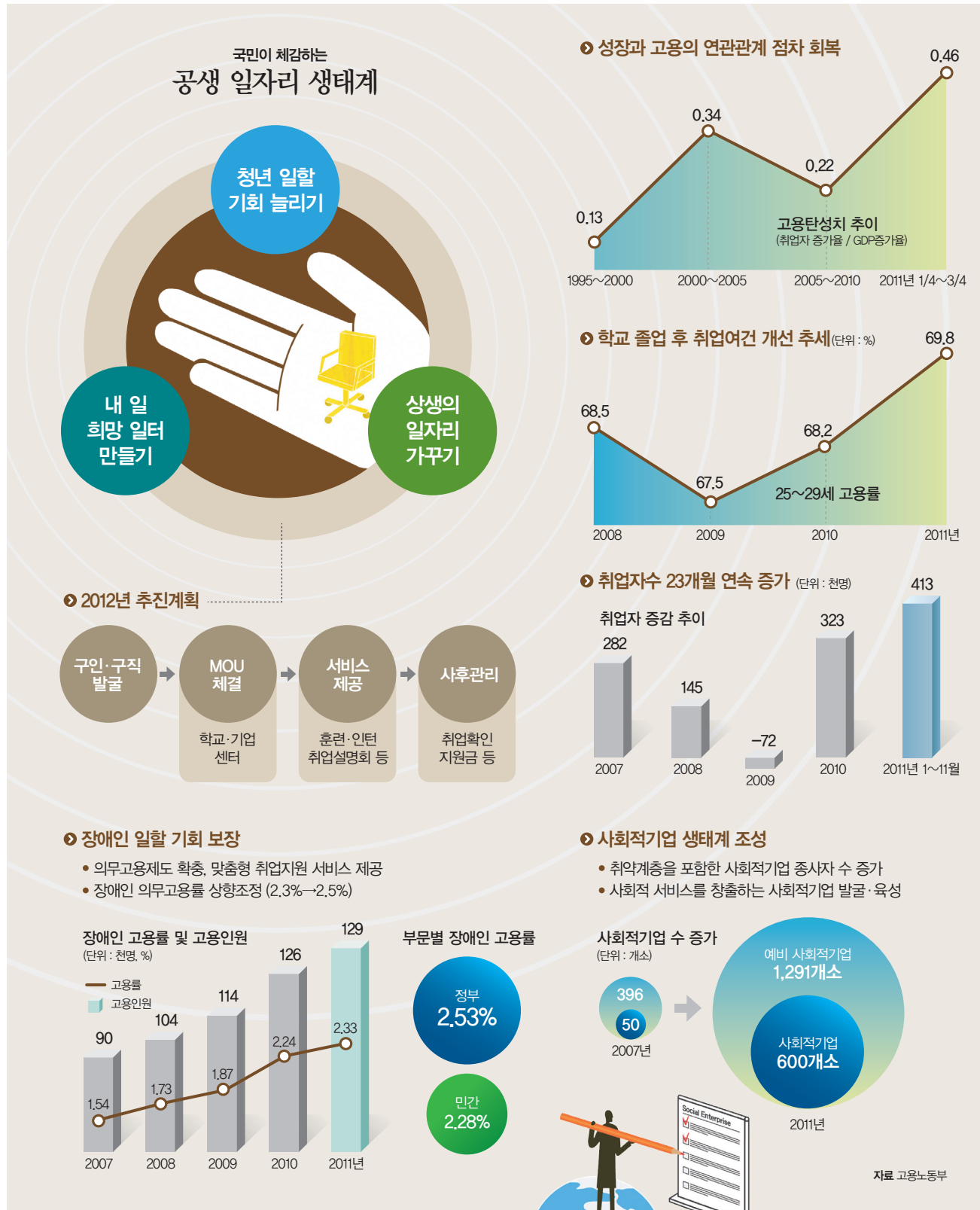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한 것이 '투명'이었다. 취임 당시부터 "금전이나 물자를 받는 등 부정행위가 없게 하고, 오해받을 행동도 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그래서였을까. 포항제철의 건설비는 다른 곳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투명경영이 화두가 된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였다.

포항제철은 로비가 통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했다. 당시 제철소 설비 변경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주일구매소'의 간섭이 심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라는 식이었다. 정치권도 청탁을 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이 모두를 물리쳤다. 자신의 호인 청암(靑巖)처럼 그의 청렴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포스텍을 명문대학으로 키워 '교육보국' 이뤄

'제철보국'과 함께 박 회장의 공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교육보국'이다. 박 회장은 1986년 포항공대(현 포스텍)를 그 이듬해에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대를 모델로 삼은 포항공대는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학생 전원 학비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1988년에는 당시로선 천문학적 액수인 1천4백억원이 소요되는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포항공대는 단기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로 발돋움했다. 교육과 인재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은 이런 말로 표현됐다. "학생들이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포항공대 벽에 금칠을 해달라고 하면 금칠이라도 해주겠다." 박 전 회장의 마지막 공식직함 중 하나는 '포스코청암장학재단' 이사장이었다. 집도 주식도 없는 그는 인재를 남겼다. G

글·변형주 기자

2조원 투입…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창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

글로벌 위기 이후 최대 과제이자 화두는 '일자리'다. 내년 역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글로벌 위기 대응에 국정 운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2년 일자리 유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공생'을 실현한다.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기업과 국민 누구나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청년 일자리 7만1천개를 새롭게 만든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용(구조) 조정의 여파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이 휴가를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지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면서 "내년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2012년 3대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장애인 의무고용 2.5퍼센트로 상향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 1조6천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린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방안으로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고용센터 취업지원을 체계화한다.

중소기업 신입직원 기업적응 훈련과 직무향상 훈련을 통한 학점 인정, 중소기업 재직자 학위 취득 지원 등 일하면서 배우기도 지원한다.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채용과 인사·관리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열린 고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7만1천개도 만든다. 청년창업자금 2천억원을 신설해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올해 3만2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근로자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감액률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10퍼센트로 완화되고 지원제한 소득도 현재 6천8백만원에서 하향 조정된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3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무급휴직자 지원 정책은 내년 경기 악화를 고려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급 휴업이나 유·무급 휴직, 인력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현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무급 2일'로 확대해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장 9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제'를 도입하고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등 낙후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야 2교대제를 주간 2교대 등으로 바꿀 경우 신규 인력 채용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1천80만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야 2교대제를 점차 없애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G

글·박근희 기자

학습·일자리 연계… 선진 교육체계 실현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9백명 신규 배치… 고졸 취업문화 정착에도 온힘

지난 12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교과부의 새해 정책 목표는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해 선진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유아부터 청년까지 모든 계층이 혜택받을 수 있는 단계적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부 박희진씨는 최근 고민 한 가지를 덜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방과후 돌봄교실에 다니며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워킹맘인 박씨는 일이 바빠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았다. 숙제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도 힘에 부쳤다.

박씨는 "돌봄교실에서 아이의 생활 전반을 지도해주는 것은 물론 탭댄스, 과학실험, 미술 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 했는데 돌봄교실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주니까 흥미를 붙인 것 같다"고 했다. 바쁜 엄마아빠의 빈자리를 돌봄교실이 채워 준 셈이다.

초등돌봄 서비스는 2012년부터 교과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교과부는 유아부터 청년까지 모든 계층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학협력·창업교육으로 대학생 취업역량 키워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5세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어린이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놀이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2012년에는 전국 중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9백명이 신규 배치된다.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진로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학 중 한 번은 직업체험에 참여해야 한다.

만 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5세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올해 1천5백명에서 내년 2천1백명으로 40퍼센트 늘어난다. 특성화고에는 산학협력·취업지원인력이 투입되며, 이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교육을 진행한다.

교과부는 특히 고졸 취업문화의 정착에 힘을 쏟고, 고졸자의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당초 2013년 50퍼센트로 잡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목표 취업률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부는 2013년 2월에 학교를 떠나는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경우 산학협력과 다양한 창업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2012년 2천명)를 활용해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센터(전국 50개 대학)의 설치로 창업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인다.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부분의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은 일반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낀다. 정부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의 교육내용과 학습용어의 차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연구장비 엔지니어' 2천명 육성

또 학교 부적응학생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 안전망인 'Wee(We+education, We+emo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 안전망(Wee 클래스·단위학교), 2차 안전망(Wee 센터·교육지원청), 3차 안전망(Wee 스쿨·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기초과학에 신진 연구인력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2012년 1천5백개, 2017년까지 3천개 확충하고 '연구장비 엔지니어' 2천명을 육성한다. 경력이 단절·지연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G

글·박소영 기자

무역 2조달러 시대 열 산업 생태계 만든다

중견기업 3천개 육성… 글로벌 전문기업 키우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창조적 기업정책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2조달러 시대가 되려면 정부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철저히 후원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한 것만 뒷받침하고 정부가 주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 확대' '위기 대응력 제고'다. 이 중 중견기업 3천개 육성 계획은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는 양분된 기존 인식을 타파, 국내 산업 허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무역 1조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 '2조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15년까지 중견기업 3천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을 결성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준비한다.

'특허 괴물' 공격에 대비한 지식재산 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은 반드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업 여건 조성… 청년창업에 1조원 투자

지경부는 에너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송배전 노후설비 등 시설 개체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2백32만개소 전력설비를 전면 점검한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자주개발률 목표를 완수하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정책금융 79조원을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한다. 중기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위기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지역별·업종별 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위기 확산이 심화될 경우 정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출 및 만기연장된 2백8조원의 상환시기 도래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도 적극 추진하고, 지난 3월 1백3억8천만달러에 달했다가 10월 96억달러로 줄어든 중소기업 수출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업의지와 기술이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1천3백억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특례보증(6천억원), 엔젤펀드(1천6백억원), R&D 전용자금(9백4억원)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청년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백억원)을 신설하고 재창업자금(2백억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창업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해 전용기금을 조성하며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올해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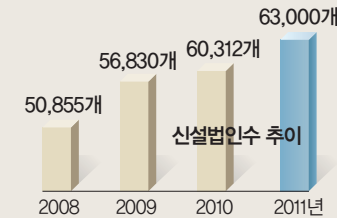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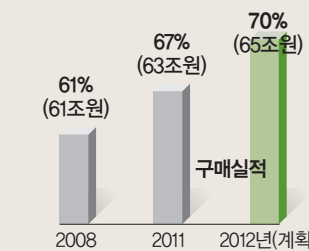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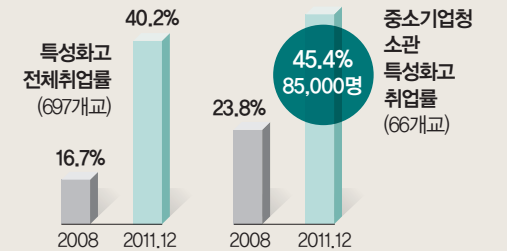
이 대통령 "연구 실패해도 또 지원해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LED 조명 보급을 확대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 환경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창업하는 글로벌 창업은 기술창업자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자본창업자는 신흥국가를 타깃으로 개척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 뒷받침하고 뒤에서 철저히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성공률이 95퍼센트나 된다는 지적에, "제대로 되려면 실패해도 또 지원해야 하고 젊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동반성장 통한 '따뜻한 시장경제' 조성

아웃도어 불공정거래·FTA 연관 품목 관세인하 반영여부 감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12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 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드는 것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은 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2012년에도 세계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도 하강압력을 받는 등의 불안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한·미FTA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 국내시장의 판도도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 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 등 네 가지의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대기업 출자구조 '지분도' 정기 일반 공개

우선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분도(持分圖)'가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시장 압력에 의해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해 독립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시스템통합(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와의 핫라인을 설치해 중소기업청 접수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3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많은 제조업 3~4개 업종과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담합 등을 근절함으로써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쓴다. 아웃도어 용품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특히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내년 1월에는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소비자종합정보망에 개설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위키피디아 방식)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내년 한 해 동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포털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에 대한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대형 유통업체 관행도 철퇴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에도 철퇴를 가한다. 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통적 독과점 유통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G

글·손수원 기자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동반성장 문화 정착	담합 등 불공정거래 근절	소비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핵심과제	•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 확산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현 • 독립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 • 가맹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	• IT·제약 등 기술혁신분야 감시 강화 • 민생품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실효성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 법집행 정당성 및 합리성 제고	• 합리적 소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확충 •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대책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관행의 획기적 개선 • 소비자가 신뢰하는 이커머스 환경 구축 • 다단계·방문판매업 건전성 제고 • 생협 유통기능 강화
정책수요	• 동반성장 노력에 비해 중소기업 체감도 저조 • 대기업집단 경제력 확대 및 폐해 우려 증대	•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지속 •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고통 지속 우려 • 시장개방, 기술혁신 등에 따른 시장환경변화에 대처 필요	• 시장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역량 결집 부족 • 법집행의 결과가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유통부문 독과점 심화 및 불공정 관행 상존 • 온라인거래 등 신유통 채널의 신뢰 제고 필요

e-Commerce 신뢰구축을 위한 구매단계별 계획

• 인터넷쇼핑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민원다발 쇼핑몰의 정보 공개
- 포털사업자와 핫라인 구축
- 온라인으로 제조사·원산지 등 정보제공

• 안전확보를 위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강화
• 휴대폰 소액결제 과정의 자동연장결제, 자동유료결제 등 부당행위 시정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관 간에 통일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 악성사업자에 관한 정보 공유
• 피해규모가 큰 위법행위는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

동의의결제 기대효과

• 소비자: 피해의 직접적 배상 등 신속·실질적 구제 가능

• 시장: 시장상황에 적합한 조치 →신속·효과적인 시장질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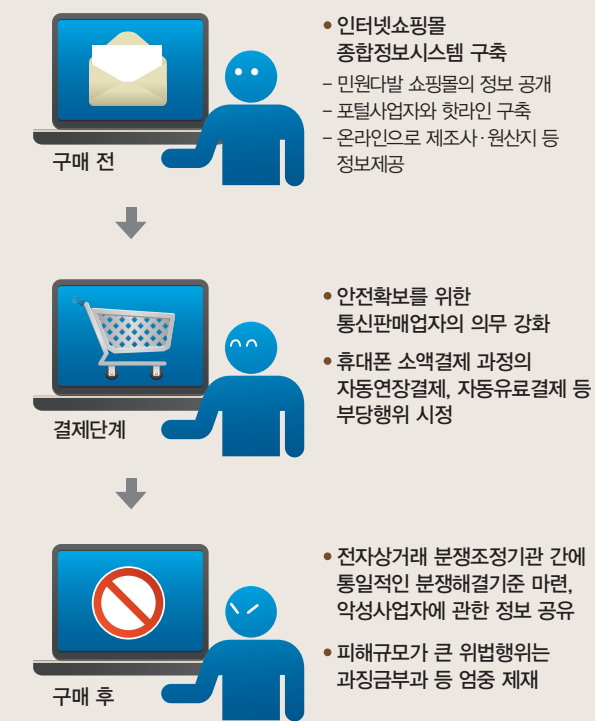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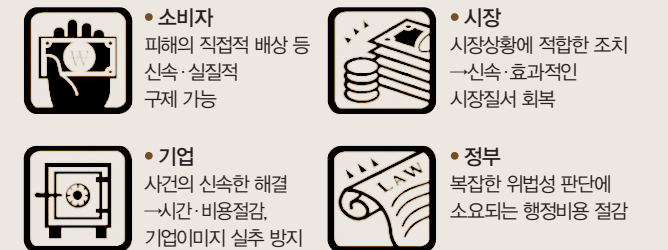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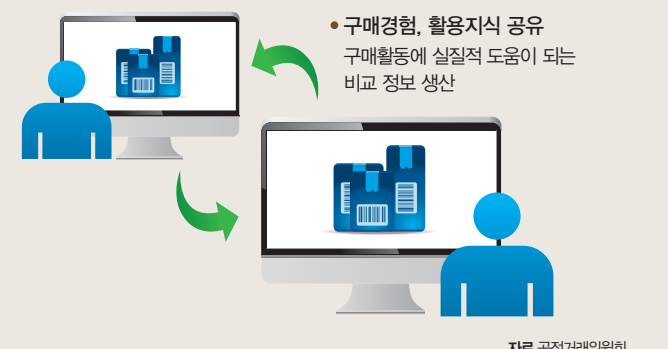
• 기업: 사건의 신속한 해결 →시간·비용절감,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 정부: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 구매경험, 활용지식 공유
구매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비교 정보 생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농업시설 현대화에 10년간 10조원 투입

FTA시대 맞아 경쟁력 강화 촉진…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강화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고 농업개혁을 완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농수산식품부의 2012년 업무 보고가 발표됐다. 새해에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협개혁을 완수하며 귀농·귀촌을 장려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위치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가진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새해에 펼칠 업무 계획은 크게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업 시설 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백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백억달러 시대 준비 ▲농협개혁 성공적 완수로 생산자와 소비자 윈-윈(win-win) ▲귀농·귀촌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새해에는 먼저 '사람'을 중시하고 정예 농어업인 집중 육성에 역점을 두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재교육과 더불어 농고·농대에 전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천5백 헥타르) 등을 통해 창업을 장려해 젊은 농어업인을 매년 2천5백명 육성할 계획이다.

FTA 계기로 농업 선진화 앞당긴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10년간 4천9백11억원을 투자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고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신물질·식품소재 개발에도 역점을 두게 된다.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미래 농어업의 중심이 '시설 농어업'이고,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시설 발전이 필수이기 때문.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20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백억달러 달성에 총력 경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인삼·김치·파프리카 등 신선식품 ▲소스·면류 등 가공식품 ▲넙치·굴 등 수산식품 등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한다.

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속화된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 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농업인 참여를 유도한다.

유통 개선과 귀농·귀촌으로 농어촌 활력 높이기로

또 품목별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적극 추진해 2012년에는 RPC 벼 매입자금의 25퍼센트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하고(2011년 20퍼센트) 가공용 쌀소비를 보다 확대(2008년 22만톤, 2012년 40만톤)해 나갈 계획이다.

원예는 농협의 계약재배면적을 확대(2011년 12퍼센트, 2012년 20퍼센트)하고 축산 관리를 위해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산지거점 유통센터 2곳을 새로 지원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부터 노량진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 현장에서는 'FTA와 한국 농어업, 귀농·귀촌'을 주제로 한 심층 토론이 진행되어 FTA와 더불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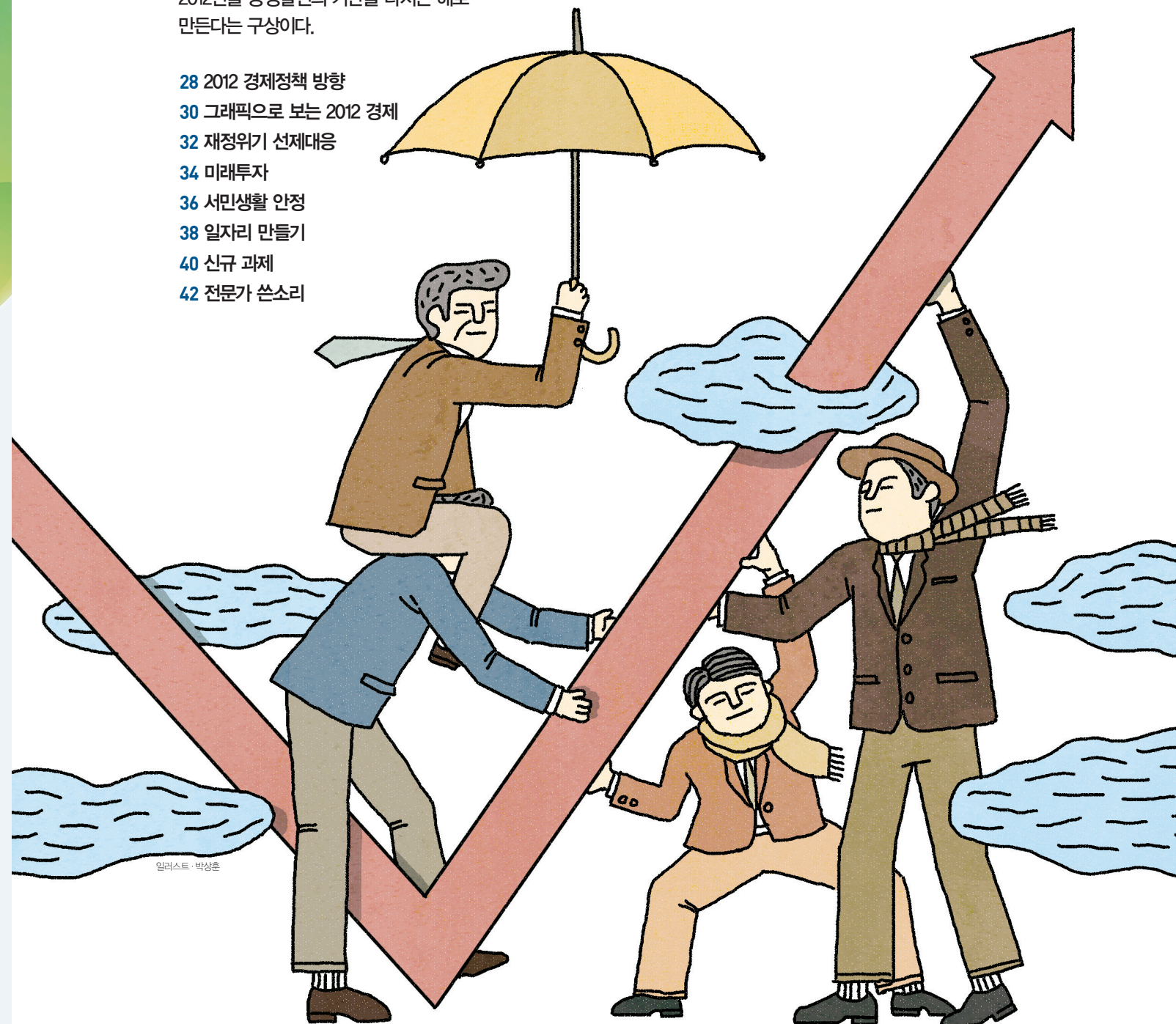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는 새해부터 농어촌 활력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1백20명을 양성하고 농지와 어선·주택 구입, 시설 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에 6백억원을 지원한다. 또 귀농·귀촌종합센터 확충,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등으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 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기획특집

경제에 활력 주고 서민 주름살 펴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2012년 전망도 썩 밝지 않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다. 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데 우리만한 '선수'는 없다. 정부는 비록 경제전망이 어둡지만 경제활력을 한층 북돋아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도 목표로 삼았다. 경기 악화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삶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2012년을 공생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러스트 · 박상훈

대외 악재 최소화… 공생발전 기반 구축

경제활력 제고·서민생활 안정 두 축으로 내수활성화 등 8대 과제 선정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두 축으로 삼아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외 여건 악화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본다는 취지다.

"위기극복 과정은 수주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EU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후 유럽의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망은 바로 나타났다. 주가가 떨어지고 유로화 대신 달러화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 원화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그 후폭풍은 강력하다. 경기가 위축되며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잖다.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3.7퍼센트로 예상되고, 고용도 올해 4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이를 위해 8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내수활력 제고,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등 4개 과제를 설정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재정과 금융 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경기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60퍼센트까지 높일 계획이다.

조선DB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내수활성화와 미래대비, 물가안정 등이 중점 추진된다. 사진은 IT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FTA 활용기반 확충해 무역 성장에 박차

금융의 체질도 개선한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 :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수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간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백퍼센트를 감면해주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만 제공하던 지원제도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1조달러 이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확충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보전과 함께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등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자원확보 등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자본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삶은 경기변화에 노출돼 있다.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맞기 쉽다. 2012년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 서민들의 생활부터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2012년 경제정책의 양대 축의 하나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생활물가안정, 청년 내 일 만들기,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가 중점 추진과제다.

먼저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슈퍼의 공동구매·도매물류를 활성화한다.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행정서비스 수수료도 인하한다. 불공정 행위는 강하게 억제한다. 과징금과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주도의 물가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 상반기 재정 60퍼센트 집행 • 가계부채 억제 및 구조 개선	**생활물가 안정** • 농축산물 등 생필품 가격 안정 • 공공요금 안정화
내수활력 제고 • 민간기업 투자여건 개선 • 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	**청년 내일 만들기**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 FTA 체결 및 활용 확대 • FTA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 신흥시장 개척 지원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지원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 녹색성장 촉진 •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 • 일하는 게 유리한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기업 원가 절감 통해 공공요금 안정

고용시장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열린 고용 사회'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고용 인프라도 강화한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증원하고 베이비부머·고령층·여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늘린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대학생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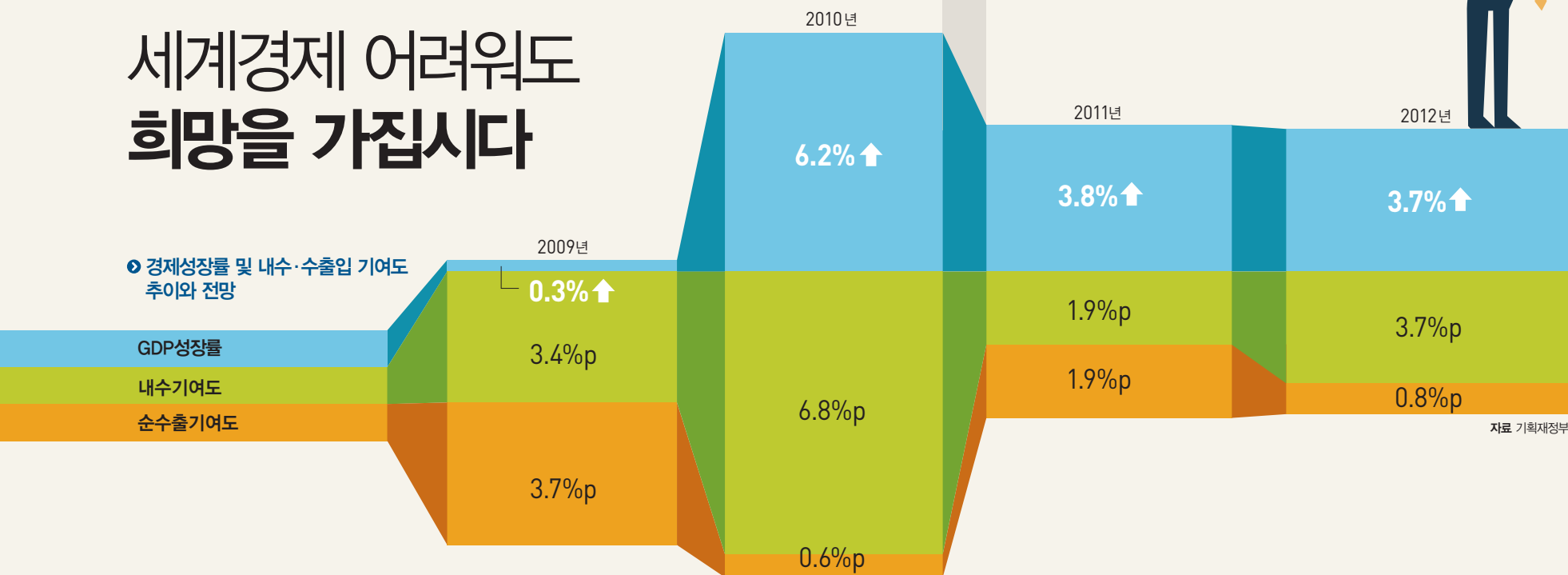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일하는 복지를 정착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세계경제 어려워도 희망을 가집시다

경제성장률 및 내수·수출입 기여도 추이와 전망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GDP성장률	0.3%	6.2%	3.8%	3.7%
내수기여도	3.4%p	6.8%p	1.9%p	3.7%p
순수출기여도	3.7%p	0.6%p	1.9%p	0.8%p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2012년 GDP는 올해보다 3.7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보다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는 상반기에 고전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물가상승세가 완화되면서 민간소비는 3.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여건 악화로 설비투자는 3.3퍼센트 증가에 머물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토목 부문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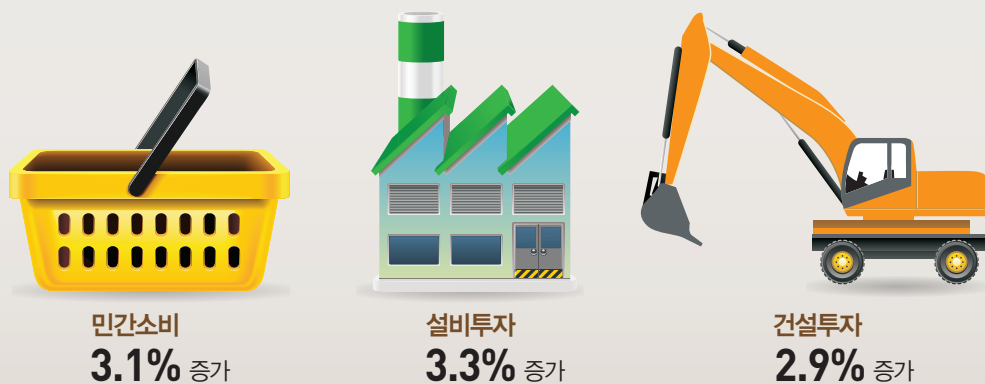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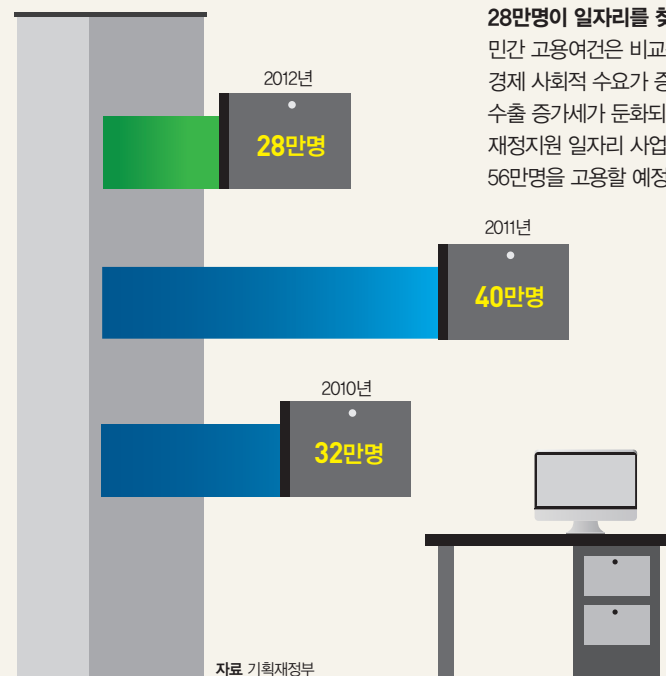
민간소비 3.1% 증가

설비투자 3.3% 증가

건설투자 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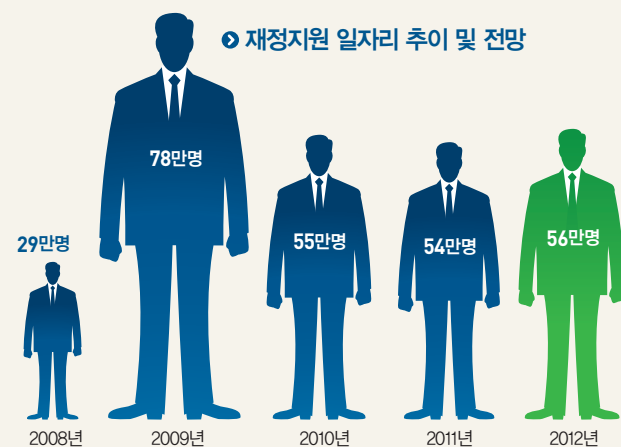
취업자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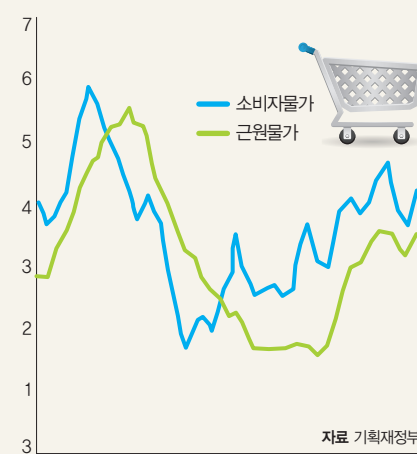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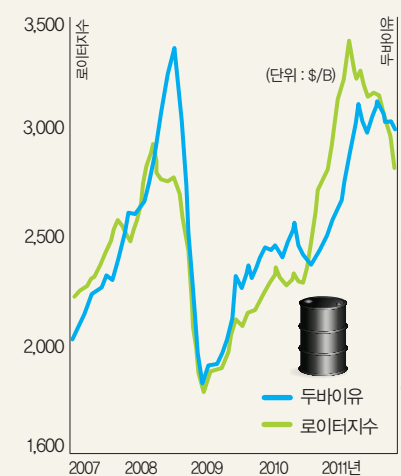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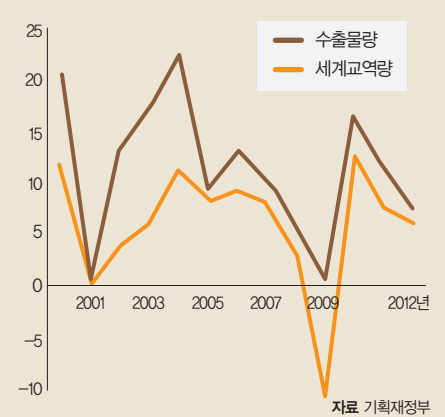
연도	취업자
2012년	28만명
2011년	40만명
2010년	32만명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

28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0만명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다. 민간 고용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다. 경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등 서비스 업종 취업자는 증가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소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54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56만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추이 및 전망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9만명	78만명	55만명	54만명	56만명

소비자 물가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3.2퍼센트 상승이 예상된다. 농산물,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요 측면의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은 상승률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학원비, 의료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입은 세계경제 불안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7.4퍼센트, 수입은 8.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1백6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물경제 역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위기를 넘는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 경기 대응력 강화

내수경기 활성화로 위축 가능성 높은 수출부진 만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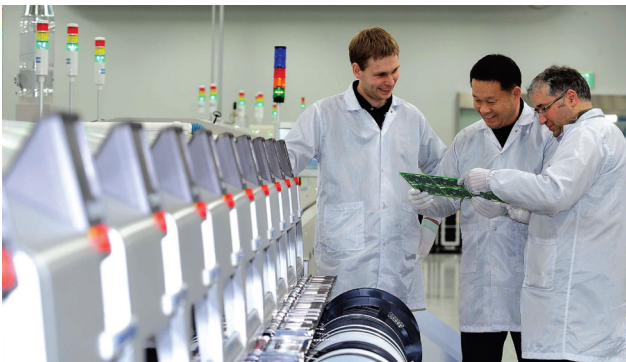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세계경제는 불안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럽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위기에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로 꼽힌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위기를 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2009년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4.8퍼센트를 집행하며 위기의 조기진압에 나섰다. 2004~2008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4.6퍼센트에 그쳤다.

2012년에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퍼센트를 집행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늘려 경기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환경투자 등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고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로 지적된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고정금리대출 늘려 연착륙 유도

정부는 2012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한 기업의 생산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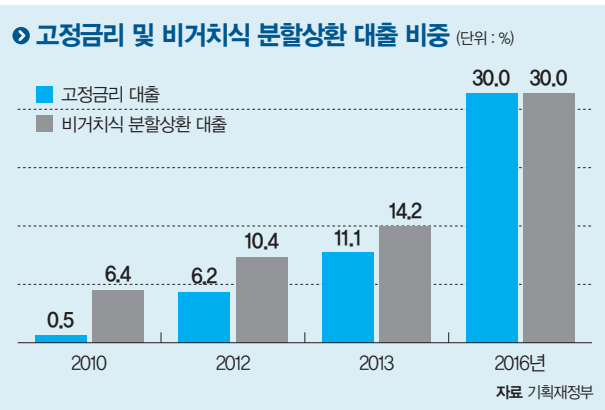
	고정금리 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2010	0.5	6.4
2012	6.2	10.4
2013	11.1	14.2
2016년	30.0	30.0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한다.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던 미소금융을 저소득층에게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 지원은 올해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신·기보 보증에서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신생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연장하되 장기간 존속하는 기업은 축소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 부문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임원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외형 확장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 부문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채구조를 건전화시켜 대외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재정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연 단위의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의 고삐를 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수출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 수출 부진을 만회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지원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기업에 세액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당형 PC방' 등 융합업종 창업규제 개선

기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농협법과 소비자생협법 등 8개 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를 넓혀 서민·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신설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지식재산의 전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수의계약 등 사용허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5년까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백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해준다. 현지사업 철수와 이전, 국내 통관, 국내 공장입지 선정 등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제공하던 매출채권보험을 창업기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 자생력도 확충한다. 전직 신사업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도 개발한다. '식당형 PC방'처럼 융합업종의 창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제약·농어업 투자 늘려 경쟁력 키운다

농어업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제약업계 M&A 세제지원 확대 나서

2012년에도 1조달러 무역시대를 이어갈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속화된다.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확충과 같은 장기적 기반 구축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제도의 도입, 인구구조 변화 대비, 세대·계층 간 공생발전 기반 확대, 새로운 사회지표를 반영한 통계 인프라 구축 등 장·단기를 아우르는 미래대비책이 펼쳐지게 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무역 분야에서 극히 취약한 분야가 제약산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통계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제약산업의 세계 수출시장은 미국이 약 12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8.6퍼센트, 중국 3.2퍼센트, 일본 1.8퍼센트였고, 우리나라는 0.4퍼센트에 불과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2.4배, 중국과 일본도 각각 8.5배, 4.9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이란 제목으로 이 리포트를 작성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유원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 강국인 미국과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비교열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향후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리포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의 하나로 FTA 활용방안 기반 강화와 더불어 농어업과 제약산업 같은 FTA 취약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인 FTA(터키·콜롬비아 등)의 조기 타결을 추진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 FTA 활용센터를 확충하고 FTA 통합무역정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 인프라도 확충하게 된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과 제약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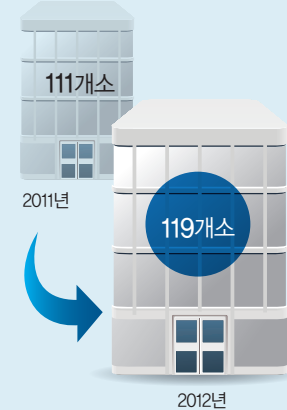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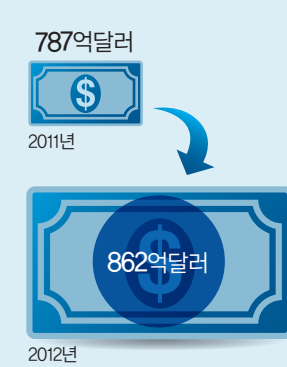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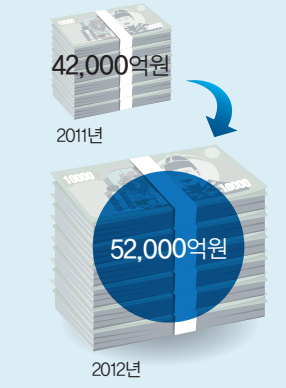
농어업과 제약업 등 FTA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있다. 먼저 농어업 등 취약 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FTA 활용 극대화…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 대비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축사·원예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또 농어업 관련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종묘·종자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제약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 간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또 신약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며, 혁신형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FTA가 적용되지 않는 신흥시장 개척도 빠뜨릴 수 없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2011년의 1백11개소에서 2012년에는 1백19개소로 늘리며, 신흥시장 공동물류센터는 2011년 17개소에서 2012년 20개소로 확대된다. 또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2011년 7백87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8백62억달러로 확대한다. 해당지역 진출 시 기업들이 안게 되는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에 힘쓰게 된다. 금융·마케팅 등 분야에서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브랜드,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후광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실탄 지원'이 확대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이 2011년의 4조2천억원에서 2012년 5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따른 사회경제 발전도 추진

녹색성장 촉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바디오디젤 의무혼합제도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RPS는 2012년 2퍼센트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2022년 1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또 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디오디젤 혼합 하한선을 2퍼센트로 규정한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된다.

신성장동력 확충 기반의 하나로 2012년 초 정보기술(IT)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IT미래비전 2020'을 수립해 발표한다. 더불어 '이공계 르네상스협의회'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초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0~5세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장기적 정책 방향 아래 2012년 3월부터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G

글·박경아 기자

경제활력 강화와 미래 대비 위한 2012 정책

구분	정책	내용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대비	혁신형 제약기업, 제약사 간 M&A 지원	•신약개발 등에 연구개발비를 일정비율 이상(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은 5%, 1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투자하는 제약기업들에게 세액공제, 국가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추진 •영세·난립 상태의 국내 제약사 간의 M&A에 세제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래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설비 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발전전력량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2012년 1월부터 2% 첫 적용.
	바디오디젤 의무혼합제도 도입	•2012년 1월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혼합 2% 이상 의무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 확대
	소프트웨어(SW) 뱅크 설립	•산업별로 지식재산권, 소유권, 보유기술 등을 분석 가공해 DB화.
	IT미래비전 2020 수립	•IT산업진흥정책, 방송통신정책, 국가정보화정책 등에서 미래 비전 전망.
	만5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만5세 과정을 '만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위해 육아휴직 급여 50만원 정액에서 임금의 40%로 확대(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학령인구 감소추세 감안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정보완,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새해에는 공휴일 검진기관이 최대 전국 1백3천개로 확대돼 평일에 바쁜 직장인들은 손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교육비 보조 늘린다

휴대폰·외식비 등 생활물가도 제도혁신 통해 가격인하 유도

2012년에는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경제 정책의 큰 틀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휴대폰 가격 등 생필품 물가를 잡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규은씨는 몸이 아프면 덜컥 걱정부터 앞선다. 바쁜 회사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큰 마음 먹고 월차를 써야 한다"며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고민은 새해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검진기관이 최대 전국 1천3백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진다. 내년 4월부터 임산부 출산·진료비 지원이 확대되며,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받는다. 부분틀니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학생 1백70만명 연 48만원까지 지원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의사의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은 높으나 진료비 증가를 부르는 행위별 수가제를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진료비를 낮춘다. 노인 인구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만 65세 이상 중증 치매·중풍 환자 요양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2011년 32만3천명에서 내년에는 36만7천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지원비도 확대 지원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은 2010년 13만명에서 2011년 1백39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2012년 1백70만명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늘렸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확대 지원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계층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학생의 1인당 지원금액은 2010년 연 30만원에서 2011년 연 36만원, 2012년에는 연 48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의 40퍼센트까지인 49만명만 포함됐으나 2012년에는 차상위계층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60만명이 포함된다.

배추부터 다년계약제 도입 안정된 수익 보장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사는 대학생 안상원씨는 얼마 전 불쾌한 경험을 했다. 평범한 대중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음식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퍼센트의 부가세가 별도 책정돼 있었다. 안씨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메뉴판 한 구석에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다"며 "이는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스마트폰 요금제

자료 기획재정부

데이터 요금	
100MB	5천원
300MB	8천원
500MB	1만원
1GB	1만5천원
2GB	1만9천원

문자 요금 (선택사항)	
100건	2천원
200건	3천원
500건	6천원
1,000건	1만원

음성요금	
100분	2만3천원
150분	2만8천원
200분	3만3천원
250분	3만6천원
300분	4만1천원
350분	4만6천원
500분	6만원
650분	7만원
800분	8만1천원
1,200분	9만원

실제로 많은 대형 외식업체와 호텔 등은 부가세를 별도 표기해 소비자의 인식 가격과 지불 가격을 다르게 하는 잘못된 판매전략을 이용해왔다. 또 일부 사업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기존 판매가격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해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때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휴대폰 구입 제도를 변경해 소비자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모든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는 단말기와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직접 선택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음성 1백분(2만3천원) 요금 구간과 문자 1백건(2천원) 요금 구간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다년계약제(재배 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해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년계약제를 통해 농가는 생육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생산량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배추부터 적용된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책임지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전문업체를 육성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위생과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G

글·박소영 기자

공공기관 채용인력 1만4천명으로 확대

고졸자 비율도 20퍼센트로 상향… 청년인턴은 1만2천명으로 늘려

정부가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회복'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서민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DB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린다. 사진은 지난 11월 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2011대한민국로스쿨취업박람회'.

"내년 역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채용도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에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표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뉴스를 접한 취업준비생 박상현(28)씨의 말이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씨는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소식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현재 디자인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이승현(32)씨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창업자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용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재정지원으로 50~60대, 취업 56만명으로 확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맞춰져 있다. 수출 증가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신규 일자리는 약 28만명이다. 이는 올해 40만명보다 12만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에 힘쓴다.

우선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4천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채용은 59.7퍼센트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자 비율도 올해 3.4퍼센트(9월 말 현재)에서 내년에는 20퍼센트로 대폭 늘리고 5년 내에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40퍼센트를 고졸자로 채운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1만2천명으로 늘린다. 인턴 역시 채용인원의 20퍼센트를 고졸자로 채용해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채용 시 인턴 경험자 우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고졸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인력부족 직종과 인력필요 직종의 취업 유도를 위해 고졸 미취업자 중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한해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턴종료 후 1백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노인과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50~60대 이상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54만명에서 내년 56만명으로 2만명 확대한다.

청년창업 지원예산 2배로 늘려 저리 융자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재취업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자 발생 시 현재 계약직 충원이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내년에는 정규직으로도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도 담고 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인원 증가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퍼센트 수준에서 할인해준다. 고용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자금 대출 시 적용금리, 지원한도를 차등 우대한다.

취업보다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내년을 노려볼 만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청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 2천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융자지원 제도인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업 관련 무료 교육과 신용 보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창업지원 정책을 전 부처와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민간 통합 일자리정보망 또는 고용이력시스템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 일자리 복지를 적극 실현한다. G

글·박근희 기자

2012년 주요기관별 신규채용 규모(잠정) (단위 : 명, %)

기관명	2011년 채용(A)	2012년 채용계획(B)	증감률(B/A)
서울대학교병원	389	1,345	245.8
한국전력공사	231	763	230.3
중소기업은행	200	598	199.0
한국토지주택공사	132	500	278.8
한국철도공사	201	412	105.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	384	92.0
한국수력원자력(주)	570	378	△33.7
한국산업은행	159	318	100.0
한국가스공사	150	224	49.3
한국수자원공사	90	166	84.4
도로교통공단	32	156	387.5
한국서부발전(주)	35	153	337.1
한전KPS(주)	250	150	△40.0
한국도로공사	111	136	2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126	137.7
한국석유관리원	40	110	175.0
국민연금공단	347	109	△68.6
한국환경공단	50	93	86.0
국방과학연구소	65	80	23.1
한국과학기술원	102	79	△22.5
신용보증기금	50	79	58.0
인천국제공항공사	41	76	8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74	289.5
한국수출입은행	45	72	60.0
대한지적공사	60	67	11.7
국립공원관리공단	53	55	3.8
한국국제협력단	25	47	8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	34	–
한국장학재단	14	33	135.7
한국관광공사	–	30	–

자료 기획재정부

해외서 복귀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

독거노인·독신자 등 1~2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2012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창업 중소기업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정책들이 특히 눈에 띄는 신규과제들이다.

정부의 2012년 기업지원 대책은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유인할 각종 세제지원을 실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은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국내 복귀와 관련된 업무도 코트라(KOTRA)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코트라는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철수나 이전, 국내에서의 공장입지 선정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 후 4년간만 법인세·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5년간 감면받는다.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세제지원으로 올해 총 9백31억원(잠정)의 세금을 아꼈다.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1년 늘려

감면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다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세액감면율(50퍼센트)을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12년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람들로 활력이 넘치는 남대문 시장.

특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도 연장한다.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사태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고효율 변압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로 분류돼 투자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변화한 가구 구조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이었다. 최근 부쩍 늘어난 1~2인 가구는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수의 44퍼센트(7백5만 가구)였던 1~2인 가구가 2010년에는 48퍼센트(8백24만가구)로 늘어났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독신자,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휴·폐업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가구특성별로 빈곤실태를 기존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개선한다. 가계동향 통계를 비롯해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복지제도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 대상을 휴·폐업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만 지원되었지만, 사업장을 휴·폐업할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퍼센트로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월 6.26퍼센트, 자동차는 월 1백퍼센트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를 자산의 소득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심화되는 전·월세난을 완화해 서민 주거문제에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 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안(민간투자사업 : BTL)을 본격 검토한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 공공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2013년부터 민자 임대주택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임대주택 민간자본 건설 검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2천5백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4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만~4천5백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저리·고정 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5백만원을 넘어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G

글·손수원 기자

눈에 띄는 2012 경제정책

구분	내용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시 장기·저리·고정금리대출 상품공급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4천5백만원, 85㎡ 이하)
내수 활성화	**투자유인**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5년간 1백%, 2년간 50%) 일몰기한 연장(2012년말→2015년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기간 연장 (4→5년)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효율 변압기 등)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위기 대응	**기업, 금융 구조조정** •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연장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수급자 선정 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긴급복지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한 경우 등을 지원 사유에 추가
물가 안정	**주택시장 안정** •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정책초점 둬야

가계소득 확보 차원에서 고용 증가·실물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우리 국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대외적으로는 유로 존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미래투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2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았는데 국내외 경제 여건은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이 결국 금융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굳어지는 현실에서 글로벌 경제는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연초부터 불거진 저축은행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더니 연말로 가면서 발표되는 각 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데다 거센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다.

물론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수활성화, 미래투자 강화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생활물가 안정,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서민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 등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 중기 세액공제기간 연장, 민간자본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적 경제뇌관을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듯하다.

다시 말하면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가 자칫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축소 현상이 진행되는 여타 국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3.4분기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8백92조5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부채비율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저성장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실질 순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가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가계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가계신용 부채비율 주요국 중 최고 수준 근접

특히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가계의 경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負)의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들로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질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2금융권이 동시에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계와 금융기관이 모두 어려움에 빠져 3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건전한 소비생활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은 위험성 내포

따라서 내년도 경제정책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발(發)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은 상환의지가 높은 건전 금융소비자들을 가급적 건전성 문제에서 여력이 있는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제2금융권 경영 악화에 대비하여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비자보호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수치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의 증가가 중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도 필요하다.

한편 가계부채의 연착륙은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의 노력도 절실하다. 먼저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악성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람직하다.

둘째, 건전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한다. 소비생활은 습관과 같아서 단순에 고치기 힘들지만 무의식적으로 즐겼던 소비생활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계도 유동성 확보와 건전 소비생활 지향해야

셋째, 가계의 구조조정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제2의 직업을 찾는 것 역시 가계의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제1의 직업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제2의 직업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

새해를 앞둔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이 '경제 안정'으로 생각되는 바 새해 경제정책의 키워드도 '가계 안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G

글·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마음의 소리’로 소통한 국악 한마당

실로암 관현맹인 예술단 창단연주회…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 들려줬죠”

지난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실로암 관현맹인 전통음악예술단’이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국악 팬들과 복지재단 관계자, 사회 각계 인사들로 만석을 이뤄 ‘실로암 관현맹인 전통음악예술단’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불 꺼진 무대 위로 은은한 조명이 켜진다.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청년에게로 관객들의 시선이 고정된다. 청년이 내쉬는 숨은 대금을 통해 청명한 선율로 바뀌어 객석 사이로 울려 퍼진다. 계단까지 꽉꽉 들어찬 관객들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소리에 집중했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연주자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연주자는 오직 ‘소리’로서 관객과 소통했고, 관객들은 심금을 울리는 그의 ‘소리’에 박수를 보냈다.

시각장애인들도 어엿한 국악인으로서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이날의 공연은 ‘실로암 관현맹인 전통음악예술단(이하 관현맹인)’의 창단연주회였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예술혼’의 등불을 켜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일을 이 예술단이 시작했다”며 “관현맹인의 빛나는 행보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포기했던 국악인의 길을 다시 열어

‘관현맹인(管絃盲人)’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시각장애인 악사를 이르는 말로,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세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2010 동아콩쿠르에서 입상, 국악인들 사이에선 명성이 높은 이현아씨가 한국전통성악곡 ‘평롱’을 관현악 반주에 맞춰 열창하고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실로암 관현맹인 창단연주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07년 전국김해가야금경연대회 병창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이민정씨는 흥부가 중 ‘제비점고·제비노정기’를 열창하며 연주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국립국악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현맹인’을 2011년 3월 2일 창단해 지금은 잊혀진 관현맹인제도를 현대에 재현했다.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해 전문음악 인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전통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것.

2011년 2월에 열린 오디션에는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프로 연주자의 길을 박탈당했던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들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6명의 정식단원과 국악 꿈나무 2명의 예비단원이 선정됐다.

대금독주곡인 ‘청성곡’으로 창단연주회의 시작을 장식한 문종석(대구예술대 대금전공 3학년)씨는 2010 영남판소리보존이사장 이병희 기악부분 준우수상 수상경력이 있는 실력파 연주자다. 이날 공연에선 대금뿐만 아니라 단소, 생황 실력까지 선보였다.

중앙대 국악과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2006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은상과 2010 제26회 동아콩쿠르 일반부 정가부문 은상을 수상해 국악인들 사이에선 이미 명성이 자자한 소리꾼 이현아 여창(女唱)은 시조시인 ‘평롱(平弄·한국전통성악곡)’을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했다. 김광섭 음악감독의 장구장단에 맞춰 울리는 여창의 곱고도 애달픈 소리는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처럼 이날 관객들의 눈과 귓속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선물했다.

세번째 순서로 등장한 이민정씨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가야금병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흥부가 중 ‘제비점고·제비노정기’를 선보였다.

2002 MBC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부분 참방(장려상보다 한 계급 높은 상), 2007 전국김해가야금경연대회 병창부문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실력을 갖고도 맹학교에서 배운 안마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 그나마도 200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국악의 길과 작별해야만 했던 이씨는 관현맹인과 만나면서 어엿한 가야금병창 연주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날의 무대에서는 신명나는 타악기 소리도 만날 수 있었다.

조주선 한양대 국악과 교수의 판소리에 고수로 등장해 흥을 돋운 이진용, 정철씨는 함께 북채를 잡은 6인의 객원 연주자들과 함께 신명나는 북소리를 선보여 이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인천혜광학교를 나왔고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단원을 역임한 실력파 타악주자들이다.

“전재덕 등 배출한 ‘천둥’의 전통 잇기를”

강호중 추계예술대 교수는 축하무대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국악가요인 ‘아버지의 노래’와 ‘꽃분네야’를 불렀다. 강 교수는 “인천혜광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천둥’이라는 실력파 사물놀이단이 있었는데 인기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재덕씨도 천둥 출신”이라며,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관현맹인과 함께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국악단의 역사와도 통해 있는 관현맹인의 인연에 대해 말했다.

정철씨는 “관현맹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주활동을 펼쳐 저희를 보고 다른 장애인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날 울린 관현맹인의 소리는 몸의 장애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다른 장애인들의 마음을 등불처럼 밝힐 수 있기에 충분했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 사진·이경호 기자

세계문화유산 보호 '문화적십자' 떴다

국제靑방패위, 서울서 첫 세계대회… 기후변화·자연재해·전쟁 등 대책 논의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국제청(靑)방패위원회(ICBS) 제1회 세계대회가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와 함께 개최한 이 대회에는 문화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해 전쟁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icbs

국제청(靑)방패위원회(ICBS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ld) 국가위원회연합 칼 본 합스부르크 회장은 "수십 년간 무력충돌은 국가 간에서 민족 간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민족 간의 싸움이 문화유산에 훨씬 치명적"이라며, "민족문화유산은 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대회는 1996년 ICBS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서의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 비상 대비와 대응'을 주제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 현황 및 진단, 향후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ICBS는 문화유산 관련 5개 국제기구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국제시청각기록협의회(CCAAA)의 공동협력 국제위원회로 1996년 출범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디지털 유산 보호 새롭게 부각

ICBS는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공조 ▲전쟁, 무력충돌,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에 대한 문화유산보호 국제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있다.

청 방패(푸른색 방패)란 무력충돌이나 정치적 소요사태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가 1954년 채택한 헤이그협약의 문화유산보호 상징 마크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제교류홍보과 김종석 학예연구사는 "국제법령상 전쟁 중에 ICBS 청색 깃발이 펄럭이면 절대로 폭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ICBS가 '문화적십자(Red Cross of Culture)'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리처드 큐린 부총재는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참혹한 자연재해와 인재가 많이 발생했고 엄청난 문화유산이 손실됐다"며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ICBS가 설립됨에 따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력충돌시 문화유산 보호장치 필요

IT시대의 문화유산 보호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김상헌 NHN 대표는 "박물관에 소장돼 찾는 사람들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IT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문화유산을 디지털화시켜 재창조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개별 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의 위험성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며,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한 기술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디지털 유산의 보호 등 새롭게 부각하는 문제들도 다뤘다.

유럽이사회 엘라디오 갈리아노 사무국장은 "기후변화가 인간뿐 아니라 문화유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유럽이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리쓰메이칸공대 다케유키 오쿠보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화재로부터 목조건물이나 목조품의 보호를 위해 수자원을 저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적지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목조품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적 급수시스템'을 강조했다.

미국 산타클라라대 지리 토만 교수는 1954년 헤이그협약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초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이그협약은 평화시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시에도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1999년 2차 의정서는 기존의 헤이그협약을 강화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2011 세계대회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 리처드 큐린 부총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홍익대 김리나 명예교수는 6·25전쟁 당시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피시켰는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위기상황 때 신속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유산 보호에 중요하다"면서 무력충돌과 정치적 위기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군대 간 긴밀한 협력도 요구했다.

서울선언 채택… "문화유산 피해 최소화 노력"

국제청방패위원회는 "문화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국제청방패위원회의 서울선언은 재해에 따른 문화유산 피해 감소를 주목표로 한다. 서울선언에 따라 청방패위원회는 재해 고위험 지역을 지정하고 유사시 대응 훈련 활동한다. 또한 IT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하는 평가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지역 발생을 예측할 계획한다.

청방패위원회는 서울선언을 통해 "문화유산 비상 상황시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수립 및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대응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기관과 구호단체의 협력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대회는 1996년 ICBS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대회"라며 "이 대회를 통해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국제적인 전문가와 석학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G

글·오동룡 기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어요! 수원 매탄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운영하는 점핑클레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장식품들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원하다면 무엇이든 배우렴"

승마에 외발자전거까지… 수원 매탄초등학교, 대한민국 1등 방과후학교로 뽑혀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3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공모, 선정해 지난 12월 1일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수원 매탄초등학교가 차지했다. 승마에 외발자전거까지 다양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며 전국 최고로 당당히 인정받은 매탄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소개한다.

초등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수요일 오후 3시의 운동장. 그런데 아이들은 체육시간이라도 되는 듯 운동장 여기저기에서 무리 지어 신나게 놀고 있다. 퍼석퍼석한 모래바람만 날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운동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교사(校舍)에서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하교해야 하는 요즘 초등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곳은 수원의 매탄초등학교. 제3회 방과후학교 대상의 주인공이다.

먼저 이곳에선 방과후교실의 다양함에 놀란다.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등 학습에 관한 강좌는 물론이고 우쿨렐레, 가야금, 성악, 플루트, 단소, 클래식기타, 바이올린, 점핑클레이, 축구, 농구, 외발자전거, 요리, 바둑, 리본&소품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예체능 과목까지 망라하고 있다.

전교생의 92퍼센트가 방과후학교에 참여

교실에서 만난 최서현(2학년) 양은 "방과후학교에서 점핑클레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며 "공부도 재밌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매탄초등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방과후교실을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하나가 돼 개발·운영한 '에듀원(Edu-One)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란 점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3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수상했다. '방과후가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교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 총 3백93편(학교 부문 2백15, 교사 부문 1백45,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33)이 응모했다.

매탄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가자는 전교생 1천7백명 중 1천5백70명, 92퍼센트에 달한다. 처음 방과후학교를 시작했던 2009년 말 27퍼센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참여율이다. 매탄초등학교의 허숙희(56) 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올 한 해 개설된 강좌만 특강 포함 2백73개

한창 배움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나이인 만큼 과목에 대한 요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한정된 교실 수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목 확장에 몸을 사리는 반면, 매탄초등학교에선 오히려 학교 측에서 앞장서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해 아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개설된 방과후학교 강좌 수는 특강을 포함해 총 2백73개, 이 중 1년 과정으로 운영 중인 과목은 86개다.

이처럼 많은 과목을 아무런 마찰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허 교장의 공이 컸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장학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허 교장은 행정기관에서 쌓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수업 처음 본다고요? 매탄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교실에서 외발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학교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스포츠 교실을 허 교장은 과감하게 설치했다. 축구, 티볼, 농구 등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는 물론이고 외발자전거나 승마처럼 희소한 종목들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켰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을 들고 담당강사들과 수강생들에게도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켰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실 확보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 허 교장은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을 이용하면 공간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많은 학교에서 시설노후를 이유로 사용을 꺼리는 체육관을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급식실에 칸막이를 세워서라도 수업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양질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한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능력 있는 학부모들을 방과후학교 교사로 끌어안기도 했다.

매탄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맞벌이 부부나 외부모 가정의 육아고민도 크게 줄었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전전해야 했던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이용해 학교에 있을 수 있어 아이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곳에선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다름없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외부모 가정 육아고민도 해결

방과후학교는 아이들의 체력관리와 인성교육에도 큰 힘이 됐다.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인 홍미정(42) 선생님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된 후 비만아동이 9퍼센트 줄었다"고 전했다. 또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실붕괴도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자랑했다.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협동심과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허 교장은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돌봄교실과 토요강좌를 강화하고, 토요일에도 학교에서 유·무상 급식을 실시해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유년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가득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과 사진·이윤진 객원기자

명문대? 스펙?… "우린 없어도 당당해요"

대전 젊은이 모임 '청춘살롱'… "우리 문제 우리 지역에서 일단 풀어보자고요"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사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 청년단체 '청년살롱'이 이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청년들과 또다른 어려운 현실에 놓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다.

박경아 기자

대전 지역 청년단체 '청춘살롱' 운영자들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저녁에 모여 사업계획을 구상한다. 운영자들인 오현규(오른쪽)씨와 황유미씨가 카페로 꾸민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나와유~ 다들 꿈 찾으러 나와유." 지난 12월 16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북카페 '이데'에서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년소통파티 '나와유' 행사를 열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그리는 이상을 다른 청년들과 나누는 자리'를 표방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과 이상과 꿈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그 이상과 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음에 맞는 이들끼리 앞으로 함께 활동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 주최하고 '청춘살롱'이 주관한 행사. 청춘살롱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단체로 일자리·주거·복지 등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 대안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20, 30대 청년 모임이다.

'청춘살롱'은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청년포럼이 출발점이 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풀뿌리사람들이 주관한 이 포럼은 '청년을 위한 나라가 있다? 레알?'이란 제목으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 청년들끼리 대안과 희망을 찾는 2030모임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 때문에 서울로 가지요. 서울에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보이고 청년문제조차 서울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러한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대전 지역 청년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청춘살롱 운영자 중 한 명인 오현규(28)씨가 청춘살롱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청춘살롱을 이끄는 사람은 7명. 가장 나이 어린 운영자가 대학 휴학생인 여현정(21)씨,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청춘살롱 대표인 이영훈(35)씨다.

풀뿌리 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센터 청년창업팀장이면서 청춘살롱 운영자 중 한 명이기도 한 황유미(28)씨는 "지금 청년 문제는 전국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 지역부터 풀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청춘살롱"이라고 말했다.

"서울이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스펙'대로가 아니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내 희망을 찾고 위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청년포럼에 소개된 몇몇 지역 청년들의 삶을 소개했다. 자취방 보증금을 빼내 대전에 카페를 차린 '20대 카페주인장' 천영환씨, 광주에서 태어나 고향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낮에는 청소년단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인디밴드에 몰두하는 '20대 음악인' 최미나씨, 맨손으로 지역문화 월간지 <토마토>를 창간한 '30대 글쟁이' 이용원씨. 이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스펙도 없고 대기업에 입사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태어난 터전을 지키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다.

7명이 모여 청년기업 등록… 온·오프라인 활동

이렇게 첫번째 청년포럼을 계기로 뭉친 대전 지역 청년 7명은 풀뿌리 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센터에 청춘살롱이란 청년기업을 등록하고, 일회성이었던 청년포럼을 이어받아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3월), 'The 위로'(6월), '레츠 컨퍼런스 어설FUN학교'(9월) 등으로 3개월에 한 차례씩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해왔다. 12월 16일 열린 청년소통파티 '나와유' 역시 청년포럼의 하나로 열린 것.

각자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저녁에 모여 청춘살롱의 사업계획을 짜고 행사 준비를 해온 청춘살롱 멤버들은 풀뿌리 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센터가 무상임대해준 중구 선화동의 사무실 한 곳을 카페로 꾸며 그곳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지기이기도 한 오현규씨는 "각자 낮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자체가 시간 제한도 따르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작은 활동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였다"고도 말했다.

"청춘살롱을 운영하는 멤버들도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으나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워도 청춘살롱을 유지하고 있죠."

물론 보람도 적지 않다.

"많지 않더라도 뭔가 변화된 걸 볼 때 기쁘죠. 우리 멤버들끼리 행사를 준비하고 제대로 해냈을 때 자신감,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조선DB

청춘살롱은 지난 9월 지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레츠 컨퍼런스 어설FUN학교'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이제는 소통과 위로, 공감대 형성에서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하는 갈증을 느낀다고도 했다.

황유미씨는 "이제는 현실을 변화하는 일로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지역에 신나게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해요"

"지역 청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패배감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1차 패배, 명문대 못 가면 2차 패배, 그래서 '지잡대(지방의 잡다한 대학의 줄임말)'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지역 청년들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온 청년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킬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기성세대의 잣대부터 바뀌어야 해요."

오현규씨는 고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청년들이 터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수도권에 일자리의 80퍼센트가 집중돼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역에 남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패배자란 인식이 깊을 수밖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지역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을 청춘살롱이 대변하고 있었다.

글·박경아 기자

무주 덕유산

푹푹~ 덕유의 눈밭 밟노라면 팍팍한 세상 시름 눈처럼 사라지네

겨울이면 덕유산은 온통 새하얀 눈꽃으로 뒤덮인다. 특히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오르는 길은 은빛의 터널로 변한다.
이 구간은 거리도 짧고 경사도 급하지 않아 등산에 자신이 없는 이들과 아이들도 눈꽃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덕유산 눈꽃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 겨울 덕유산은 순백의 세계를 선물한다.

덕유산 향적봉 일대는 상고대가 아름다운 곳으로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덕유산(德裕山)은 크고 넓다.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2도 4군에 걸쳐 있다. 전체 면적만 2백19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최고봉인 향적봉(1천6백14미터)을 중심으로 대봉(1천3백미터) 중봉(1천5백94미터) 무룡산(1천4백92미터) 삿갓봉(1천4백10미터) 등 해발 1천3백미터 안팎의 장중한 능선이 남서쪽으로 30여 킬로미터를 달린다. 향적봉에서 무룡산과 삿갓봉을 거쳐 남덕유에 이르는 주능선의 길이만도 무려 16킬로미터에 달한다.

덕유산은 그 품새만큼이나 사계절 다른 풍경을 펼쳐 보인다. 봄날에는 연둣빛 신록과 연분홍 철쭉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 사이로 흐르는 구천동 맑은 계곡이 장관을 연출한다. 가을이면 오색단풍으로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인다. 그리고 겨울. 겨울 덕유산은 눈부신 은세계를 연출한다. 사진작가들은 덕유산의 이런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시사철 몰려든다.

'눈같이 내린 서리' 상고대가 아름답기로 소문

덕유산은 상고대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눈같이 내린 서리다. 섭씨 영하 6도 이하, 습도 90퍼센트 이상일 때 상고대가 피는데 안개가 많고 기온차가 심한 해발 1천5백미터 안팎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덕유산에서도 상고대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정상인 향적봉 일대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나무계단을 따라 상고대와 눈꽃이 화려하게 핀다. 마치 나무에 밀가루를 뒤집어씌워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얀 산호처럼 보이기도 한다.

향적봉으로 오르는 코스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삼공리 매표소에서 출발해 백련사를 거쳐 오르는 코스. 그리고 두번째는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 내려 향적봉으로 가는 코스다. 등산을 겸할 목적이라면 첫번째 코스가 좋지만 상고대와 설산을 감상할 목적이라면 무주리조트 곤돌라를 타는 것이 낫다. 곤돌라를 타고 향적봉에서 내려 15분만 오르면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닿을 수 있다.

12월이면 덕유산은 이미 하얗게 눈이불을 덮어쓰기 시작한다. 이파리를 모두 떨어낸 나무들은 새하얀 눈꽃을 피운다. 나무 둥치도 눈으로 만들어놓은 것처럼 하얗다. 덕유산 상고대가 다른 산에 비해 유난스러운 것은 산 아랫녘으로 금강 줄기가 흐르기 때문. 낮이면 햇살을 받은 금강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눈구름이 되고 오후 늦게부터는 덕유산에 눈이 되어 내린다.

정상인 향적봉 바위 위에서 만나는 덕유산 설경은 알프스를 무색하게 한다. 덕유산의 정상에는 거센 바람 때문에 큰 나무가 없다.

1 사진작가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향적봉대피소. 2 한겨울이라면 오전 11시 이전에 가야 상고대를 볼 수 있다.

3 반디랜드에 가면 신기한 고생대 화석도 만날 수 있다. 4 지전마을 돌담길.

여·행·정·보

가는 길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무주 IC에서 진안 방면으로 좌회전, 적상 3거리에서 또 한 번 좌회전하면 무주리조트와 구천동 방향이다. '구천동' 이정표를 보고 달리면 된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무주터미널과 구천동터미널까지 고속버스가 운행한다. **반디랜드**(063-320-5670, www.bandiland.com)와 지전마을은 설천면에 있다. 지전마을은 반디랜드 못미처 '상길산' 또는 '지전마을'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

잠잘 곳 무주리조트는 스키 슬로프와 관광용 곤돌라뿐 아니라 특급호텔, 가족호텔, 눈썰매장, 노천온천탕,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췄다. 더욱이 리조트 주변에 맛집과 숙박업소가 많아 겨울철 가족휴양지로 안성맞춤이다. 삼공리 구천동 관광단지에 30여 개의 장급 여관이 있다. 반디랜드 통나무집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다.

먹을 곳 무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어죽이다. 금강 상류에서 투망으로 잡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모래무지 등을 넣고 끓인다. 고기의 뼈를 발라낸 뒤 쌀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뭉근한 불에 끓인다. 거의 다 끓을 때쯤 수제비를 떼어 넣고 파, 마늘, 부추 등을 섞는다. 얼큰하고 매콤한 맛에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무주군청 뒤편 **금강식당**(063-322-0979)이 유명하다.

습기는 많고 바람은 거센 평원지역이라 산죽과 철쭉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조망이 뛰어나다. 북으로는 황악산과 계룡산이, 서쪽으로는 운장산과 대둔산이, 남쪽으로는 지리산 반야봉이 버티고 있다. 동쪽으로는 가야산과 금오산이 펼쳐진다. 순백의 능선들이 어깨를 걸고 달려간다. 능선은 푹 꺼지기도 하고 다시 되잡아 채며 올라서기도 한다. 산 뒤에 산이 서 있고 한 겹 한 겹 모두 눈을 뒤집어쓰고 있다.

향적봉 대피소는 사진작가들의 베이스캠프

향적봉 능선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봉우리 아래에 위치한 향적봉 대피소다. 이곳은 사진작가들의 베이스캠프 역할도 한다. 무주리조트 곤돌라가 생기기 전에는 향적봉 대피소의 절반 이상을 사진작가들이 차지했다고 한다. 상고대와 눈꽃을 보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해가 뜨면 눈꽃은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무주리조트 곤돌라는 오전 9시 무렵부터 운행하는데 한겨울이라면 오전 11시 정도까지는 상고대를 볼 수 있다.

내처 향적봉 대피소를 지나 덕유중봉까지 가보자. 운이 좋다면 앙상한 주목에 핀 화려한 설화를 찍을 수 있다. 중봉까지는 30~40분 거리. 방한복과 아이젠, 스패츠 등 기본 장비만 착용한다면 초행자들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향적봉 대피소를 지나면서 주목과 구상나무가 적당히 섞여 있는 산길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눈꽃도 절경이다. 나무들은 손가락 굵기의 앙상한 가지에도 제 몸뚱이보다 더 두꺼운 눈살을 붙이고 있다. 검은 나무 둥치와 새하얀 눈이 대조를 이룬다. 덕유중봉에 서면 굽이치는 남덕유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려오는 길은 구천동을 거쳐 삼공리 관광단지로 이어지는 코스를 택한다. 구천동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가운데 하나다. 전설에 따르면 '9천명의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즉 '9천명의 스님이 머물렀다'는 뜻의 '九千屯(구천둔)'에서 '구천동'이라는 이름이 비롯됐다는 설도 있고 구천동 계곡의 굽이가 9천굽이라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설도 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들러 청정자연 체험도

어쨌든 구천동은 그만큼이나 깊은 계곡이다. 행락객으로 붐비는 여름과 달리 겨울 구천동은 고요하다. 계곡은 반쯤 얼어붙었고, 그 위에 눈까지 내려앉아 있다. 오밀조밀한 길은 걷기에도 더없이 좋다. 내려오는 길에 얼음장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촬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반디랜드를 빼놓지 말자. 곤충박물관과 반딧불이 자연학교, 반디별천문과학관, 청소년 야영장, 통나무집, 반딧불이 서식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희귀곤충을 만날 수 있는 곤충박물관 전시실도 볼거리가 많다. 반디를 키우고 있는 깜깜한 방으로 들어가면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빛나는 반딧불이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주 설천면에는 우리 옛 돌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을이 있다. 지전마을이다. 30여 호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인데, 마을 구석구석으로 나지막한 돌담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지전마을의 돌담은 지난 2006년 등록문화재 제262호로 지정됐다.

진흙을 이겨 담을 쌓았는데, 그 사이 돌을 집어넣어 담을 단단하게 했다. 담에 지붕을 만들어 비에 덜 젖도록 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집집마다 들어선 감나무와 돌담이 어우러져 한적한 겨울풍경을 빚어낸다. 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개천에 서 있는 수령 3백년을 훌쩍 넘긴 커다란 느티나무도 볼 만하다. 지전마을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이기도 하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몸통보다 더 큰 동그란 얼굴에 미소 띤 입매의 '동구리'를 통해 세상을 표현한 권기수의 〈리플렉션〉전. 작품에 나오는 매화, 대나무, 난초 등은 사군자에서 따왔다.

나는 동글동글… 너의 삶은 어떤가

권기수 개인전 〈리플렉션(Reflection):명경지수(明鏡止水)〉

권기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998년 〈THE SHOW 1998〉, 2002년 〈아! 꽃이다〉, 2004년 〈붉은 분수〉 등

활짝 피어난 꽃과 무지개 위에 동그란 얼굴의 '동구리'가 웃고 있다. '동구리'는 쪽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무지개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상자 위에 앉아 있기도 한다. 알록달록 화사한 색감과 동구리가 어우러진 그림을 보노라면 마음속에 등불이 반짝, 켜진 듯 밝고 따뜻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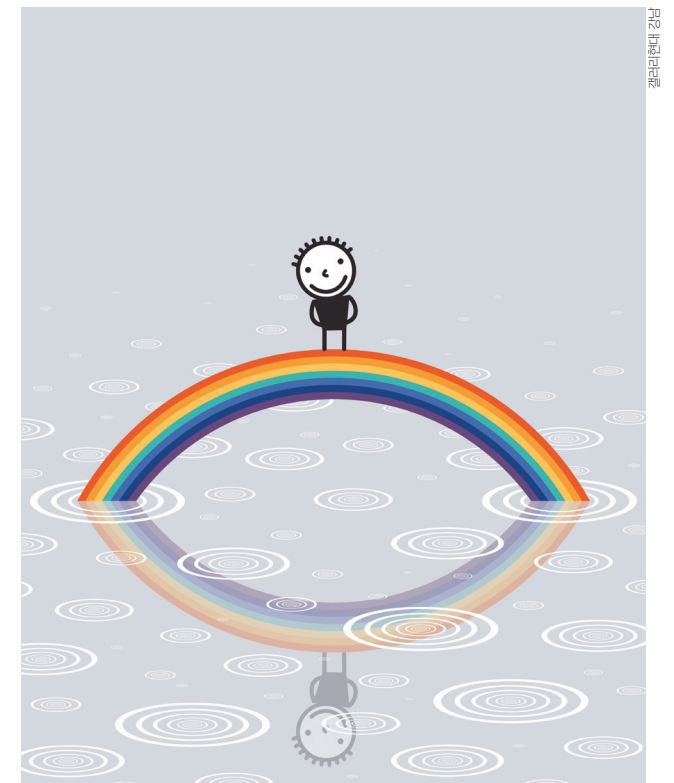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현대 강남에서 열리고 있는 권기수 작가의 개인전 〈리플렉션(Reflection):명경지수(明鏡止水)〉의 풍경이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문화의 향기에 젖어 분위기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격인 전시다. '난 그림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미술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쉽고 편안한 그림이다.

권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동구리'를 테마로 평면 회화는 물론 조각, 영상, 설치 등 40여 점의 새로운 실험작들을 대규모로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그 어떤 동구리보다 더욱 화려하고 섬세해진 기교가 더해져 눈을 사로잡는다.

권 작가가 동구리 작업을 해온 것은 올해로 10년째다. 동그란 머리에 단순한 눈 코 입이 가미된 동구리는 마치 만화 캐릭터 같은 분위기다.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표상이기도 한 동구리는 가난한 예술가로 불안한 미래와 싸우던 시절, 세속을 벗어나 여유 있게 살아가는 도인에 대한 동경심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다.

글 · 김효원 (스포츠서울 경제사회부 기자)

전시일 12월 31일까지 | **문의** 갤러리현대 강남
www.galleryhyundai.com ☎02-519-0800

반(半)그림자-일렁이는 금빛 물결

무지개

오만과 방심

조선시대 때 정승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달인이었다. 그들은 종종 신진관리를 보게 되면 '저놈 정승감이다', '저놈 판서감이다'는 등의 평을 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판서감보다는 정승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평이었다.

우리가 흔히 강직함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김종서(金宗瑞·1383~1453)의 경우 잘 들여다보면 정승감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강직함의 도가 조금은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일찍 간파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 최고의 3대 정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황희(黃喜)가 바로 그였다.

한번은 공조판서로 있던 김종서가 황희를 비롯한 정승들을 공적으로 접대할 일이 있었다. 이때 김종서는 공조에서 술과 과일을 준비시켰다가 황희에게 혼쭐이 난다. "국가에서 예빈시(국빈을 대접하거나 종실 및 정승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는 기관)를 의정부 옆에 둔 까닭은 3정승을 대접하라는 것인데 어찌 공조가 사사로이 음식을 장만할 수 있단 말이냐." 평소의 황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게다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황희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지 옆에 있던 맹사성이 물었다. "김종서는 유능한 사람인데 어찌 대감께서는 유독 그에 대해서만 엄격하십니까?" 이에 황희가 답했다. "김종서는 성격이 고매하고 기운이 날째 일을 과감하게 처리해 뒷날 우리 자리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때 신중하지 않고 자만하면 일을 그르칠까 염려스러워 내가 일부러 그의 오만한 기운을 꺾으려는 것이오."

김종서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강직과 오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큰 화를 입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황희가 김종서를 책망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세종대왕은 홀로 오지에서 6진개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종서에게 우의정을 내리려 했다. 정승급으로 올리려 한 것이다. 이에 황희가 반대해 병조판서를 맡게 된다. 그때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김종서가 조금 삐딱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본 황희는 "여봐라! 병판(병조판서) 앉은 자리가 기운 듯하니 바로 잡아드려라"고 은근히 꾸짖었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에게 12세의 어린 단종을 부탁했다. 김종서는

일러스트·유재형

단종 재위 중 전권을 쥔 좌의정
강직함이 힘을 얻자 오만과 방심으로
수양대군의 수상한 움직임 경계 소홀히
끝내 역사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

단종 체제하에서 전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단종을 지켜냈어야 한다. 명분론 중심의 역사해석에서는 패자(敗者)에 대한 동정심과 어우러져 김종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의하기 힘들다.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이미 도성의 뜻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 그렇다면 최대한 경계를 하며 대비를 했어야 한다.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는 우를 범하곤 한다. 게다가 김종서는 힘의 집중으로 인해 오만했던 면이 있었고 동시에 방심한 면도 있었다. 오만과 방심은 일을 그르치는 만화(萬禍)의 근원이다. 김종서의 오만과 방심은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의 역사적 흐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종서를 실록의 맥락에서 읽으면 이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사무실만 들어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혹, '실내증후군'?… 창문을 여세요

회사원 박씨는 퇴근 후 집에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기운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던 터라 몸살감기에 걸린 것인가 싶어 창문을 꽁꽁 닫고 난방온도를 더욱 높였지만 그럴수록 증세가 심해졌다. 박씨의 증세는 다름 아닌 전형적인 '실내증후군(빌딩증후군)'이었다.

실내증후군이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난방을 하며 장기간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박씨처럼 실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증후군은 실내로 들어가면 증상이 나타나고,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면 괜찮아진다는 점에서 감기와는 다르다. 회사, 차 안, 집 등 하루의 80퍼센트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하다.

조선DB

실내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실내외의 온도차이다. 여름에는 냉방병으로 나타나고 겨울철엔 실내증후군으로 나타난다. 겨울철 온도가 높은 방 안으로 들어가면 고온건조한 공기에 노출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눈과 코, 목 등의 외부 공기와 직접 접하는 신체 점막이 메말라 따가워진다.

또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실내 먼지 증가로 두통과 전신 피로, 집중력 저하, 아토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철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는 여름철보다 먼지가 세 배 이상 많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정도가 더 심하다. 보통은 신선한 공기를 쐬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장기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온도 18~20도… 2~3시간마다 창문 활짝

실내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내 온도를 18~20도에 맞추고 환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2~3시간마다 20분씩 환기만 제대로 해주어도 대부분의 실내증후군 증상이 없어진다.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는 두 개의 창문을 함께 열어 두면 효과가 크다. 이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의 가구도 함께 열어 두면 더 좋다. 다만 너무 이른 아침에는 오염된 공기가 지표면 가까이에 머무르므로 오전 10시~오후 7시 사이에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환기와 함께 채광에 신경 쓰고 가습기나 실내식물 등을 이용해 습도(40~60퍼센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삼가야 하며 간간이 산책을 하거나 맨손체조를 하면 실내증후군 예방 및 증상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최근 인기를 끄는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도 효과가 있지만 환기를 대신하진 못한다. G

글·손수원 기자

〈청춘은 길어도 아프지 않다〉

아픈 청춘들… 극복도 청춘의 몫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양영철 옮김
말글빛냄 펴냄 · 1만6천5백원

청춘들이 아파한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외로워한 것은 어느 시대나 청춘의 특징인 양 여겨왔다. 그렇지만 이토록 아파한 것은 드문 일이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위로하는 책이 낙양의 지가를 올렸겠는가.

일본의 청춘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한다. 우리든 일본이든 아파하는 청년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 나왔다. 〈청춘은 길어도 아프지 않다〉.

제목만 보아서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 유명한 다치바나 다카시가 도쿄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인터뷰한 내용이 1부를 구성하고 있다.

2부는 칠순에 이른 다치바나가 스무 살 청춘들에 들려준 강의로 채워졌다. 3부는 수업을 듣고 인터뷰한 학생들의 글이 실려 있다. 눈치챘겠지만 2부를 읽고 1부, 3부 순으로 읽는 것이 더 낫다. 청춘의 구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으니까 말이다.

다치바나의 강의를 읽다 보면 역시 그이답다는 생각이 든다. 지의 종횡무진이라는 낱말이 딱 맞다. 더욱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을 풀어나가는 장면은 우리로서는 낯설지만 상당히 흥미롭다. 그가 갓 스무 살이 된 청춘들에 해준 말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청춘이란 극좌표 공간에서 데카르트 좌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극좌표는, 조종사가 "3시 방향에서 적기가 급속도로 접근 중, 거리 5백마일, 미사일 발사 준비"라고 말할 때에서 엿볼 수 있듯 "내가 봤을 때 몇 시 방향에 대상물이 있고, 적인지 아닌지, 그곳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무엇이건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구도"를 일컫는다.

데카르트 좌표는 "극좌표 공간에 머물던 인간의 뇌를 해방시켜 세상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좌표계"를 뜻하는 바, "자신과 자연환경, 자신과 사회환경을 냉정히 분석하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에 행동을 결정하는 새로운 원리"를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한 것과 비슷한데 이런 인식의 전환을 청년기에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마도 우리랑 비슷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거치는 일본 청년들인지라 해주고 싶었던 말인 듯싶다.

"대학입시까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학이란 어딘가에 존재하든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뇌 속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대학입니다. 이를 한시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스무 살 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의 청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도쿄대생들이 직접 만난 괴짜들의 파격적인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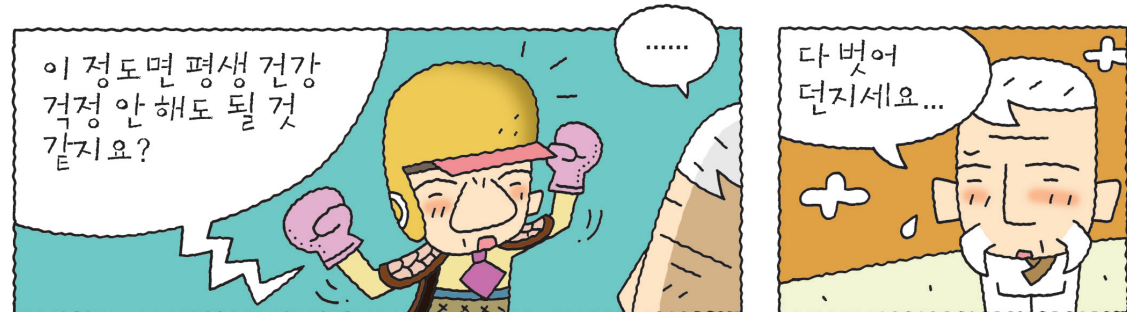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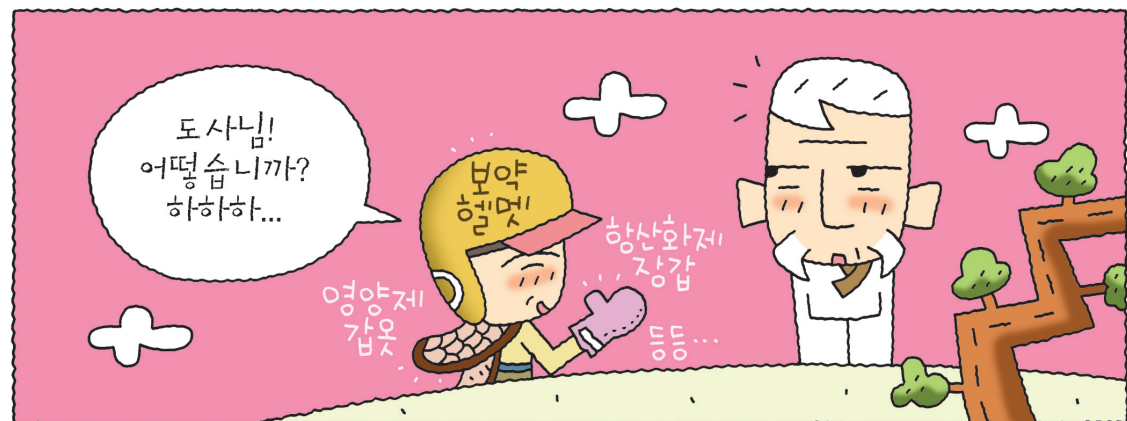
도쿄대생들이 만난 저명인사 가운데 괴짜가 있었다. 릴리 프랭키. 미술을 전공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연기도 한다. 현실에 기죽어 타협하려 용쓰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선동한다. 성에 대한 생각도 개방적이어서 파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읽다 보면 그래 이런 어른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과 방황에 대해 철부지처럼 말해주는 어른이 있는 사회는 청춘들이 보기에 훨씬 너그럽고 따뜻할 터이니 말이다.

〈일식〉으로 잘 알려진 히라노 케이치로의 도움말은 꽤 실용성이 높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가운데 뒤엣것을 직업으로 삼으란다. "잘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일이 좋아지게" 마련이란다.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 엄숙하고 계몽적으로 말을 건네면 반발만 산다. 그들을 감동케 할 방도가 이 책에 있다. 당연히 아파하는 청춘들이 이 책을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겪는 아픔이 삶의 거름이 되리라는 확신을 얻을 터다.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본연의 모습을 찾으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신에게 건강을 빌지만
정작 그런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한다.
- 스토바이스

미술과 음식이 만났다 기발할까, 맛있을까?

〈맛있는 미술 Art&Cook〉

세종문화회관

작품도 감상하고 나만의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전시 공간이 달달한 향기로 가득하다. '미술과 음식의 조화'라는 주제로 내년 1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맛있는 미술 Art&Cook〉 전시에서는 국내 작가 22명이 음식과 식재료를 활용한 입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서는 직접 파티셰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달콤한 샤프란'이 운영되고 있다. '나만의 케이크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체험 프로그램은 성인과 어린이로 각각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비텔리우스의 케이크'는 파티셰와 함께 자신만의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자리다. 전시 관람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콘셉트로 케이크를 디자인해볼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은 평일 매시 20분마다 진행되는 '쿠키 만들기'와 주말에 하루 2회 '머핀 만들기'가 있다. 전시를 보면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식을 꾸며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느림의 미학 섹션에서는 작가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창조 섹션에서는 사물과 공간을 재해석한 작품을, 소통 섹션에서는 일상 속에 숨겨진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G

정리 · 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2012년 1월 29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152

축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부산 광복로 일대를 수놓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직경 40미터의 대형 트리부터 길이 3백90미터의 빛터널 등으로 장식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장기자랑을 통해 크리스마스 스타를 뽑는 프로그램 '나는 클스다'가 열린다. 가족사진 콘테스트 및 축제 현장을 담은 UCC 영상 공모전 등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일시 2012년 1월 9일까지 **장소** 부산 광복로 일대 **문의** ☎051-256-1225

전시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과 함께 하는 만화 전시** 국내 복합 만화 문화공간인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은 성탄과 연말을 맞아 이색 공연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선보여왔던 한혜연 작가의 원화를 비롯해 '태권브이'의 김형배, 인기 웹툰 '더 파이브'의 정연식 등 만화가 20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24일에는 만화 전시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도 펼쳐진다.

일시 2012년 1월 29일까지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문의** ☎032-310-3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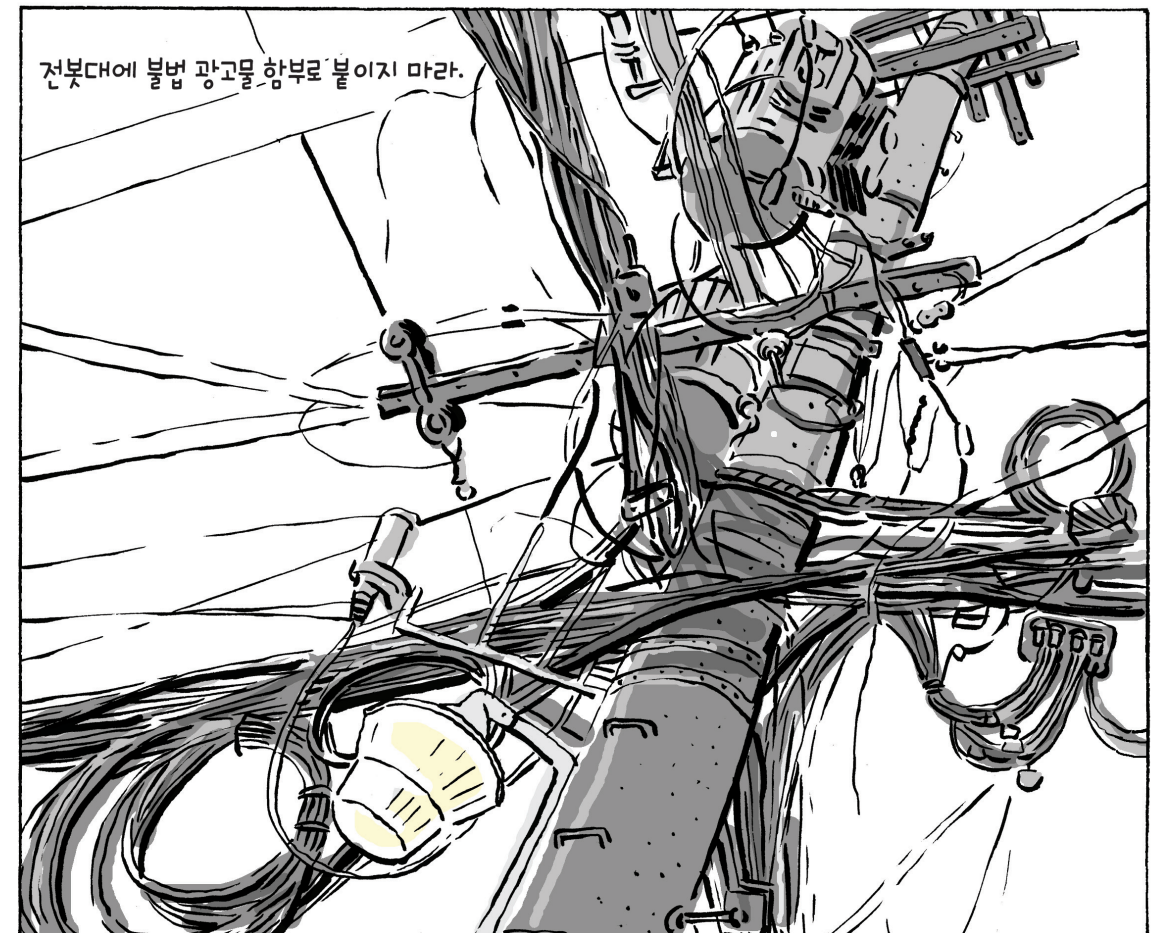
마술 **최현우의 상상극장** '매직 콘서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마술사 최현우가 연말 콘서트를 연다.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순간이동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며 인형이 살아 움직이기까지 한다. 공연 초반 20분 동안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루전 매직'은 화려한 영상과 조명,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관객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연인들만을 위한 프러포즈 시간도 주어진다.

일시 12월 25일까지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문의** ☎1566-5490

12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2월 4일~12월 10일)

곡명	가수
1 너랑 나	아이유
2 Trouble Maker	현아,현승
3 살기 위해서	노을
4 비밀	아이유
5 Cry Cry	티아라
6 하얀 고백 (Lately)	인피니트
7 Be My Baby	원더걸스
8 삼촌 (Feat. 이적)	아이유
9 그 노래를 틀때마다	허각, LE
10 그리워 그리워	노을

고마해라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효과 없는 불법 광고물 그만 붙이세요.

K팝은 여러가지다!

막 나온 어린 여가수 아이유의 신보는 흥미롭다. 음반을 딱 보자마자 'K팝'이라는 용어로 포장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댄스 음악과는 의도적으로 여러 점에서 차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아이유는 이번 2집을 구상하면서 윤상, 김광진, 정석원, 이적, 김현철, 정재형, 윤종신, 김형석 등 1990년대부터 활동해온 중견 작곡가들이 써준 곡을 받았다. 받았다기보다는 의뢰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요즘 아이돌 댄스 판을 주름잡고 있는 이른바 '후크 송' 작곡가는 없다. 아이돌 음악과는 명백한 분리 선을 치고 있음의 증명이다. K팝 가수들이 섹시 댄스와 화려한 비주얼로 무장했다면 자신은 '음악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예능이 아닌 예술을 택했다고 할까. 그렇지 않았다면 1993년생의 고3 여학생에게 실력파 작곡가들이 선뜻 곡을 내줄 리 없었을 것이다.

앨범에 13곡이나 되는 많은 곡을 수록한 것도 요즘 트렌드와 다르다. 근래 가수들은 디지털 싱글 시대를 맞아 앨범에 달랑 한두 곡 아니면 잘해야 다섯 곡 정도를 수록하고 있다.

댄스 일변도 벗어나 새해 초 일본서 쇼케이스

한 제작자는 "과거 음반 자체로 마케팅하던 시절에는 많은 곡을 넣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와 시간이 없다"며 흐름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많은 제작자나 가수들이 앨범이라는 작품세계보다는 싱글을 통한 상업적 흥행에 좌우되는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

아이유는 이런 풍토와 트렌드로부터 떨어져 나와 찬찬히 음악을 만들었던 1990년대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반(反)디지털'이요, '안티 아이돌'인 셈이다. 물론 2집의 타이틀곡 '너랑 나'가 대박을 친 '좋은 날'과 같은 작곡가, 유사한 분위기를 취한 것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아이돌과 다를 게 뭐냐는 지적도 있다. 이 곡이 앨범에 혼자 덩그러니 걸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유가 이런 음악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해 1월 일본에서 쇼 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가동한다고 한다. 성공여부를 떠나 아이돌 댄스음악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성격의 'K팝'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한국 음악은 오로지 아이돌 댄스밖에 없나?" 하는 K팝에 대한 외국의 반한류와 혐한류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다.

K팝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나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바짝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수시장의 정비'다. 내수시장이 다양한 음악 콘텐츠가 경합하는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 〈나는 가수다〉 열풍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음악계가 걸 그룹이나 아이돌 후크 송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 검증된 다채로운 장르와 가수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K팝과 한류는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음악의 흐름은 결코 인위적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승부는 대중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다. 우리 대중들이 아이돌 음악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저런 음악이 쟁패하고 대중들이 그중 좋은 것을 골라내는 음악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투애니원과 함께 아이유도, 김범수도, 인디 밴드 옐로 먼스터즈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음악들이 모두 바깥에 나가 K팝이 얼마나 가지가지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